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Trends and Countermeasures on Non-tariff Barriers
against Fishery Produc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5.

임경희 · 김연수 · 황산산 · 이슬비 · 정현기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임 경 희 : 연구 총괄, 제1장 제1·2절, 제5장

〈연구진〉

김 연 수 : 제1장 제3·4·5절, 제3장

황 산 산 : 제4장

이 슬 비 : 제2장 제1절

정 현 기 : 제2장 제2절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제3절 연구 추진방법	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

제2장

미국, 중국의 수산물 교역 및 통관거부 동향 · 8

제1절 미국의 수산물 교역 및 통관거부 동향	8
1. 미국의 수산물 수입 동향	8
2. 미국의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	12
제2절 중국의 수산물 교역 및 통관거부 동향	18
1. 중국의 수산물 수입 동향	18
2. 중국의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	22

제3장

미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실태 분석 · 28

제1절 미국 수산물 수입 관련 주요 제도	28
제2절 주요 비관세장벽 분석	34
1.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	34
2. 어업 관련 정보 역추적 불가 수산물 수입거부 조치	43
3. 식품안전기준 미달에 따른 수산물 역류 조치	50
제3절 미국 수산물 비관세장벽의 특징	61

제4장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실태 분석 · 63

제1절 중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주요 제도	63
1. 식품안전법	64
2.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	67
3.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	69
제2절 주요 비관세장벽 분석	71
1. 식품안전 국가표준	71
2. 수산물 수입 심사 및 평가 시스템	76
3. 통관 투명성과 일관성의 결여	78
제3절 중국 수산물 비관세장벽의 특징	78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80

제1절 요약	80
제2절 정책 제언	84
1. 수산물 비관세장벽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84
2. 합리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R&D 및 이력 정보 관리 체계화	84
3. 국제 협상을 통한 검역 기준 현실화, 절차 표준화	85
4. 국내 관련 제도 정비와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	86
5.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87



참고문헌 · 88

표목차 “

〈표 1-1〉 미국, 중국의 수산물 관련 제도(수입 수산물 중심).....	3
〈표 1-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6
〈표 2-1〉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교역 동향.....	8
〈표 2-2〉 미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국가(2014~2016년 평균).....	9
〈표 2-3〉 미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품목(2014~2016년 평균).....	10
〈표 2-4〉 한국의 對미국 수산물 교역 동향.....	10
〈표 2-5〉 한국의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	11
〈표 2-6〉 미국의 식품변질로 인한 통관거부 건수(2005~2013년).....	13
〈표 2-7〉 미국의 주요 수입 국가별 통관거부 현황(2012~2016년).....	14
〈표 2-8〉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품목별 통관거부 현황(2012~2016년).....	15
〈표 2-9〉 미국의 對한국 수산물 통관거부 현황(2014~2016년).....	16
〈표 2-10〉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교역 동향.....	18
〈표 2-11〉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국가(2014~2016년 평균).....	19
〈표 2-12〉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품목(2014~2016년 평균).....	20
〈표 2-13〉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교역 동향.....	21
〈표 2-14〉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	21
〈표 2-16〉 중국의 수산물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에 따른 통관 거부 현황.....	23
〈표 3-1〉 미국 수산물·수산물식품 수입 관련 규제 제도.....	33
〈표 3-2〉 2014~2016년 對미 수산물 수출 평균액 및 품목별 비중.....	38
〈표 3-3〉 2014~2016년 對미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 어업별 비중.....	39
〈표 3-4〉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에서 수입자에 요구하는 정보.....	44
〈표 3-5〉 미국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대상 수산물의 미국 HS 코드 및 제품 설명.....	45
〈표 3-6〉 미국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향후 별도의 시행일이 지정될 대상 수산물 (새우 및 전복류)의 미국 HS 코드 및 제품 설명.....	48
〈표 3-7〉 미국의 우리나라 수산물 관련 수입경보 현황.....	52
〈표 4-1〉 중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제도.....	63
〈표 4-2〉 중국 식품안전법 주요 개정 방향.....	64
〈표 4-3〉 중국 식품안전법 수출입 식품관련 신설 내용.....	66

〈표 4-4〉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주요 내용.....	66
〈표 4-5〉 중국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 개정 방향.....	70
〈표 4-6〉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분류 및 수산관련 표준 예시.....	73
〈표 4-7〉 즉석 조류 제품 미생물 허용 기준.....	74
〈표 4-8〉 수산 조미품 미생물 허용 기준.....	75
〈표 5-1〉 미국 수산물·수산식품 수입 관련 현행 주요 비관세장벽.....	82
〈표 5-2〉 중국 수산물·수산식품 수입 관련 현행 주요 비관세장벽.....	83

〈그림 2-1〉 미국 식품의약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규모 비교	12
〈그림 2-2〉 미국의 식품류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2005~2013년)	13
〈그림 2-3〉 미국의 對한국 수산물 유형별 통관거부 유형	17
〈그림 2-4〉 중국의 수산물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에 따른 통관거부 현황(월별)	23
〈그림 2-5〉 중국의 수산물 상품 증서 불합격 현황	24
〈그림 2-6〉 중국의 수산물 서류미비 불합격 현황	25
〈그림 2-7〉 중국의 對한국 수산물 유형별 통관거부 현황	26
〈그림 2-8〉 중국의 수산물 유형별 통관 현황 및 기준치 초과·금지성분 유형별 통관 현황	27

요약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WTO, FTA 등 시장 개방의 확산으로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WTO 규정 상 허용 가능한 수입규제수단을 비관세장벽으로 적극 채용하고 있다. 그 결과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수입금지, 수량규제 중심에서 최근 기술적 규제, 국가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대부분은 각국 국내 제도·법령 등의 형태로 도입·운영되어 국내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5년 이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우려되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조치(TBT, SPS)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모든 식품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또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국의 수산식품 위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입 제품에 취해지는 수입경보 조치를 필두로,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수산식품의 수입 금지 제도, IUU 어업과 수산물 원산지세탁 근절을 위한 수산물 수입 감시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對미국 수출 원활화를 위해서는 각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산·학·관·연 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자국민의 요구가 높아지자 식품 감독·관리제도를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정비하고 관련 기술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취해지고 있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국가표준제도, 사전검사검역허가제는 對중국 수산물 수출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평가된다. 국가표준제도의 경우 수출국의 전통식품 기준과 중국 고유 식품표준 기준과의 불일치성이, 사전검사검역허가제는 중국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위험분석 시 증장기의 시간 소요, 요구 정보의 방대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외에도 동일 제도에 대한 지역 간 운용 차이로 야기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수산물·수산식품 비관세장벽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다. 주요 수출국에 대해 국제기구를 비롯해 각국 정부 및 민간기관, 언론 등의 종합 모니터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과 분석된 정보의 업계 공유·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합리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R&D 추진 및 정보 관리 체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이다. 수입국이 요구하는 항목의 과학적 증명을 비롯해 수출국 수산식품 특성에 대한 수입국의 이해 기반 마련, 수출 협상 원활화, 국제규범 선도를 위해 과학적 근거 DB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수산물·수산식품의 생산부터 교역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 체계화도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 고유 수산식품의 제조·가공과 관련해 국제 협상을 통한 검역 기준의 현실화, 국가 간 주요 교역품에 대한 통관·검역 절차의 표준화·간소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와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수출업체의 비용 상승 요소로 작용하는 국내외 제도 격차에 대한 정비와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도입, 맞춤형 컨설팅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이다. 정부 협상을 통한 비관세장벽 해결과 함께 각 국에서 수출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해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사전적 파악과 협력·공조체계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은 강화되는 추세

■ WTO, FTA 등 시장 개방의 확산으로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비관세장벽 강화로 자국 산업을 보호

- 수입국은 WTO 규정 상 허용 가능한 수입규제수단을 비관세장벽으로 실행

- 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같은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채용
- 그 결과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넓어져 과거 수입금지, 수량규제 중심에서 최근 기술적 규제, 국가 정책 등으로 확대

■ 비관세장벽의 대부분은 각국 국내 제도·법령 등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제 2, 3위의 상위 수출국인 미국, 중국이 최근 비관세장벽을 크게 강화하면서 국내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관세장벽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
 - ※ 미국 : 자국 내 수입 식품 관라감독 강화, 수산물과 관련된 기술조치의 신규 도입
 - 중국 :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식품 감독·관리제도 정비, 기술조치의 강화
-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수출 위축, 수출업체에 대한 비용 상승 초래 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자유무역의 효과를 위축

수산물 수입 시장인 미국, 자국 내 반입 수산물·수산식품의 안전성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력

■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국 내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해양대기국은 수산자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요 제도를 도입·운영

- 미국은 1974년 이래 자국의 식품 위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경보 조치를 발동
 - 우리나라와 관련해 어류의 내장 미제거, 수산물 HACCP 미준수에 대해 관련 조치 발동, 각 수입경보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요건 충족 필요
 - 수출국 HACCP 기준에 대한 정보 분석·공유, 국내 제도와 격차 해소,

합치성 마련 등 제도 검토

- 미국 기준을 초과해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
 - 對미국 수산물 수출국의 어업을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으로 분류하고, 수출 어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
 - 해양포유류 개체수, 부수어획량 제한, 국내 어업별 해양포유류 혼획량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관련 자료 확보 및 어업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입법 모색
- IUU 어업과 수산물 원산지세탁 근절을 위한 수산물 수입 감시제도를 도입
 - IUU 어업 및 원산지세탁에 특히 취약한 수산물·수산식품(대상 수산물)을 설정하고, 대상 수산물 수입 시 어획~통관 전 과정의 허가·보고·기록물 보관 의무를 부과
 - 우선대상 품목의 경우 정보 수집 노력 항목에 대한 대비는 물론, 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응해 對미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

소비재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중국, 자국 식품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강도 높게 정비

■ 중국은 자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법, 출입국동 식품검역법, 수출입상품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등의 제도를 운용

- 일부 식품군(조미김, 젓갈 등)에 대해 중국 국가표준제도 적용에 따른 통관 애로 발생
 - 조미김의 균락총수를 국가표준으로 설정, 젓갈은 수산 조미품의 위생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위반 시 수입 거부
 - 수출 협상 원활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 대표 수출 품목에 대한

글로벌 제조·위생 규범 선도, 전통수산물식품의 제조 특성에 대한 상대국 이해를 돕는 근거 자료 마련

-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통해 과거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 수출 농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 여부를 결정
- 신규 품목 수출에 대한 과도한 시간 소요, 방대한 정보 요구 등이 문제 시
- 한·중 간 통관·검역 기준 절차의 표준화·간소화,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모색
- 중국은 2015년 10월 식품안전법을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개편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생산·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 및 상위기관 중심의 제도 운용을 발표
-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통관·검역 관행이 유지되면서 지역별 통관 난이도가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 수출업체의 혼란 야기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합리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R&D 추진 등이 요구

■ 수산물 비관세장벽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 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 확산

- 주요 수출국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정부기관, 민간기관, 언론 등을 통한 종합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국내 대응 실태를 분석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업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의 적극적 홍보·확산 추진

■ 과학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R&D 및 수산물식품 이력 정보 관리 체계화

- 미국의 포유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수출업종으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요구 항목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 R&D와 나아가 수출 협상 원활화,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 추진
-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글로벌 규범의 선도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생산부터 수출까지 관련 세부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계화 모색

■ 국제 협상을 통한 검역 기준 현실화, 절차 표준화의 모색

- 한국 고유 수출품의 제조·가공 특성에 대한 이해 마련과 한-중 간 통관·검역 기준·절차 표준화·간소화
-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시의 적용 기준, 절차 등을 표준화하거나 간소화 공동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국내 관련 제도 정비와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

- 국내 제도와 글로벌 수산국 제도 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 규제준수 요건 충족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도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업체의 역량 강화

■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추진

- 비관세장벽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대국과의 네트워킹·파트너십 구축 및 수출 상대국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킹·파트너십 구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 도모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의 수산물 교역은 자유무역주의와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GATT, WTO의 출범으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관세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에 더해 세계적으로 허용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추세 속에서도 각국은 기술규제나 국제표준, 환경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s: NTBs)을 통한 수입 제한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WTO 기술장벽위원회(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에 접수된 기술장벽 통보문 건수는 2000년 632건에서, 2010년에는 1,874건, 2015년에는 1,98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¹⁾

수입국은 WTO 규정 상 허용 가능한 수입규제수단을 NTBs로 실행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같은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넓어져 과거 수입금지, 수량규제 중심에서 최근에는 제조방법, 식품표시, 위생기준과 같은 기술적 규제, 국가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치화하기 용이한 관세와 달리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국내 제도와 법령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복잡성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도 수산식품과 관련하여 자국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절차, 식품표시규정 및 환경규제 등 다양한 종류의 규제를 운용하거나 또는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

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6.4. p.14 [그림 II-1] 참조

은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수출국별로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국의 제도·법령의 형태로 운영되는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은 종종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거나 국내 유관기관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국내 수산업계의 중소·영세성으로 인해 수출업체가 독자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비관세장벽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수산분야 비관세장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무역장벽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수출 위축, 수출업체에 대한 비용 상승 초래 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자유무역의 효과를 위축시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화되는 비관세장벽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제2, 3위의 수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양 국가가 최근 수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도입·강화해 중단기적으로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비관세장벽 중 미국, 중국의 기술 조치(TBT, SPS) 동향을 분석하고, 5년 이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또는 우려되는 기술 조치를 분석,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1-1〉 미국, 중국의 수산물 관련 제도(수입 수산물 중심)

구분	미국	중국
주요 제도 및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검사 없는 역류조치 시행('15.7월 시행) ·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 금지('22년 시행) · 어업 정보 역추적 불가 수산물 수입 거부('18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15.4월 개정) · 식품안전 국가표준(수시 개정)

주 : 저자 작성

제3절 연구 추진방법

미국과 중국의 최신 수산물 수출 제한 이슈를 도출하고자 최근에 시행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장벽 모니터링 조사, 산학연 공동 연구·세미나 등을 바탕으로 취합된 자료를 통해 양 국가의 수산물·수산식품과 관련된 주요 수입 관련 규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규제는 관련 문헌자료와 근거 법률을 토대로 수출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동 조치에 관한 다른 국가의 사례분석,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국내 업계 대응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WTO 체제 출범 이후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내에서도 TBT와 SPS로 대변되는 비관세장벽 전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남상열(2005)의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은 “비관세장벽 가운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의 관련 통보문 및 WTO 무역상 기술장벽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WTO 체제하의 무역상 기술장벽 전반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²⁾

이재영(2007)의 「WTO 기술무역협정과 위행 및 식물검역협정과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는 WTO 체제에서 TBT 협정과 SPS 협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두 협정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이러한 예외규정이 우리나라 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³⁾

이후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EU, 그리고 2007년에 미국과 차례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류창수(2010)의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는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에 포함된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동 조치가 향후 우리나라의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등 주요 온실가스 집약적 업체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⁴⁾

오선영(2014)의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당사자인 4건의 WTO 판례 분석을 통해 “TBT 협정의 핵심조항인 기술규정의 적용범위의 문제, 내국민 대우 원칙,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 원칙”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TBT 협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⁵⁾

선아름 외(2015)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의 對미국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였다.⁶⁾

중국 비관세장벽의 무역영향에 관한 연구는 FTA 체결 이전부터 이전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TBT 규정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영향 예측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태정 외(2010)의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은

2)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서언 pp.2~3.

3) 이재영, 「WTO 기술무역협정과 위행 및 식물검역협정과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4), 2007., p.197. 참조

4) 류창수,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 『통상법률』, 93, 2010., p.140. 참조

5)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47, 2014., p.495.

6) 선아름·나희량,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19(1), 2015., p.205. 참조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TBT 관련 규정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WTO 및 주요 FTA 사례 중에서 TBT와 관련된 규정, 협상 동향, 주요 특성 등을 분석하고”, 한중 FTA “기술규제의 관점에서 TBT가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FTA TBT 협상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⁷⁾

정환우(2013)의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시사점」은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중 TBT 및 SPS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관련 협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對중국 통상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⁸⁾

이탁 외(2014)의 「비관세장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동향에 대한 파악과 함께 정부 및 민간부분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TBT에 대한 국제동향, 협정문 내용, 경제적 효과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고, TBT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고찰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⁹⁾

본 연구는 지금까지 비관세장벽에 관해 진행된 연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띤다. 우선 연구 대상을 미국과 중국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무역장벽 전반에 대해 다루었던 초기 연구들과 대별되며, 미국과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다룸에 있어서도 식품,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산물·수산식품과 관련 있는 비관세장벽에 연구 범위를 좁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각국의 수산물 관련 제도 중 현재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시행이 확실히 된 신규 제도를 중심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의 관점에서 수출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고자 한다.

7) 하태정·송종국·정다울·전주용·장용준·문선웅,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정책연구』, 2010., 발간사

8) 정환우,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시사점」, 『한중사회과학학회』, 11(3), 2013., p.90. 참조

9) 이탁·윤기관, 「비관세장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6(1), 2014., pp.36~37.

〈표 1-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연구자(연도): 남상열(2005) 연구목적: WTO 무역상 기술장벽을 분석하고 국내 대응 방안 모색	문헌조사 공동연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 다자무역규범에서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분석 ·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방안
	2	과제명: WTO 기술무역협정과 위생 및 식물검역협정과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이재영(2007) 연구목적: WTO TBT협정 및 SPS협정을 분석하고 그 적용관계 및 쟁점별 차이점 연구	문헌조사	· WTO TBT협정의 분석 · WTO SPS협정의 분석 · WTO TBT협정과 SPS협정의 주요 쟁점 분석
	3	과제명: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연구자(연도): 하태정 외(2010) 연구목적: WTO/FTA 체제하에서 TBT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부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인터뷰 외부기관 공동연구 통계자료분석	· TBT 관련 규정과 협상 동향 및 주요 특성 분석 · 한중 FTA의 TBT가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FTA TBT협상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 제시
	4	과제명: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 연구자(연도): 류창수(2010) 연구목적: 미국 기후변화 입법안에 포함된 국경조치의 WTO 협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동 조치의 국내 영향에 측 및 대책 수립	문헌조사 해외판례분석	· 미국 Waxman-Markey 법안 입법 추진 배경 및 동 법안 국경조치의 주요 내용 분석 ·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검토 · 법안 발효로 인한 국내 영향 및 대응 방안 모색
	5	과제명: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시사점 연구자(연도): 정환우(2013) 연구목적: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 분석을 통한 對중국 통상협력의 확대 심화	문헌조사	· 중국의 TBT 실시 현황 및 쟁점 · 중국의 SPS 실시 현황 및 쟁점 · 對중국 통상 협력 시사점

6	<p>과제명: 비관세장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p> <p>연구자(연도): 이탁 외(2014)</p> <p>연구목적: TBT의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수행</p>	<p>문헌조사 통계자료분석</p>	<p>· 농산물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론적 고찰</p> <p>· 한중 농산물 교역의 실증 모형 분석</p>
7	<p>과제명: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p> <p>연구자(연도): 오선영(2014)</p> <p>연구목적: TBT협정의 핵심조항인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원칙,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 원칙을 살펴보고 TBT협정의 해석 기준 제시</p>	<p>문헌조사 해외판례분석</p>	<p>· WTO에서 다루어진 4건의 TBT협정 관련 사례 분석</p> <p>· TBT협정의 해석기준 제시</p>
8	<p>과제명: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p> <p>연구자(연도): 선아름 외(2015)</p> <p>연구목적: 한국의 對미 전기전자 품목 수출에 있어 무역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 분석</p>	<p>문헌조사 통계자료분석</p>	<p>· 對미 수출 전기전자품목의 기술장벽 및 수출 현황 파악</p> <p>· 중력방정식모형에 따른 수출 영향 실증분석</p> <p>· 무역기술장벽의 對미 수출 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p>
본 연구	<p>- 초기 연구는 주로 FTA TBT 협정 전반에 관해 이루어졌고, 이후 수행된 국가별 연구의 경우에도 전기전자, 농산물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음</p> <p>-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수산물·수산식품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그 중에서도 현재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시행이 확실시된 신규 제도를 중심으로 수산물 수출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p>	<p>국내외 문헌조사 해외사례분석 통계자료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p>	<p>· 미·중 수산물 교역 및 통관거부 실태 분석</p> <p>· 미·중 주요 비관세장벽의 실태 분석</p> <p>· 對미·중 수산물 수출 저해요인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p>

제2장 미국, 중국의 수산물 교역 및 통관거부 동향 《

제1절 미국의 수산물 교역 및 통관거부 동향

1. 미국의 수산물 수입 동향

1) 對세계 수산물 수입 동향

2005년 이후 미국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2005년 166억 달러에서 2016년 260억 달러로 연평균 4.2% 증가하였다. 수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의 수산물 무역 수지는 2005년 79억 달러에서 연평균 5.4%의 큰 폭의 적자 증가율을 보여 수산물 수입량이 수출량의 약 3배 이상을 상회하였다.

〈표 2-1〉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05~2011)
교역규모	16,550	19,857	27,261	25,532	25,951	4.2
수 출	4,307	4,766	6,268	6,064	5,928	2.9
수 입	12,243	15,091	20,993	19,467	20,023	4.6
무역수지	△7,937	△10,325	△14,725	△13,403	△14,096	5.4

자료 :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4.30.)

국가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인접국가인 캐나다에서의 수산물 수입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의 수입이 3,155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5.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전체 수입액의 약 78% 이상을 차지하

였다. 반면 한국은 약 158개의 수입국 중 17위로 0.9%를 차지했다. 수입의 경우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미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국가(2014~2016년 평균)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비중	국가명	금액	비중
	전체	6,087	100.0	전체	20,161	100.0
1	캐나다	1,308	21.5	캐나다	3,155	15.6
2	중국	1,170	19.2	중국	2,688	13.3
3	일본	777	12.8	칠레	1,744	8.7
4	한국	501	8.2	인도네시아	1,748	8.7
5	독일	319	5.2	인도	1,475	7.3
6	네덜란드	226	3.7	베트남	1,466	7.3
7	홍콩	177	2.9	태국	1,420	7.0
8	스페인	135	2.2	에콰도르	950	4.7
9	프랑스	138	2.3	멕시코	649	3.2
10	멕시코	119	2.0	노르웨이	487	2.4
∴	기타국	1,221	20.1	기타국	4,381	21.7

자료 :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4.30.)

품목별로는 새우가 6,171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0.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어, 게, 참치, 바닷가재, 틸라피아, 대구, 소금, 메기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개 품목의 수산물 수입액은 16,029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9.5%를 차지하였다.

〈표 2-3〉 미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품목(2014~2016년 평균)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전체	6,086	100.0	전체	20,161	100.0
1	연어	934	15.3	새우	6,171	30.6
2	바닷가재	735	12.1	연어	2,946	14.6
3	명태	499	8.2	게	1,578	7.8
4	대구	352	5.8	참치	1,448	7.2
5	게	280	4.6	바닷가재	1,144	5.7
6	어분	200	3.3	틸라피아	927	4.6
7	넙치	205	3.4	대구	567	2.8
8	가리비	177	2.9	소금	520	2.6
9	새우	232	3.8	메기	371	1.8
10	소금	150	2.5	가리비	358	1.8
∴	기타 품목	2,322	38.2	기타 품목	4,131	20.5

자료 :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4.30.)

2) 對한국 수산물 수입 동향

미국과 한국의 수산물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수입 및 수출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對미 수출액은 2012년 191백만 달러에서 2016년 241백만 달러로 연평균 6.0%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2-4〉 한국의 對미국 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수출	물량	29,559	29,403	29,378	33,536	29,498	△0.1
	금액	191	218	217	232	241	6.0
수입	물량	55,179	63,578	71,704	77,299	81,779	10.3
	금액	177	221	237	247	244	8.3
무역수지		14	△4	△20	△15	△2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trass.or.kr, 검색일 : 2017.4.30.)

2016년 기준 對미 주요 수출 품목은 김이 70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빨고기 37백만 달러(15.5%), 오징어 18백만 달러(7.4%), 굴 16백만 달러(6.8%)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어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67%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2년 이후 오징어, 게살, 미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굴, 넙치(황어), 게는 연평균 약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표 2-5〉 한국의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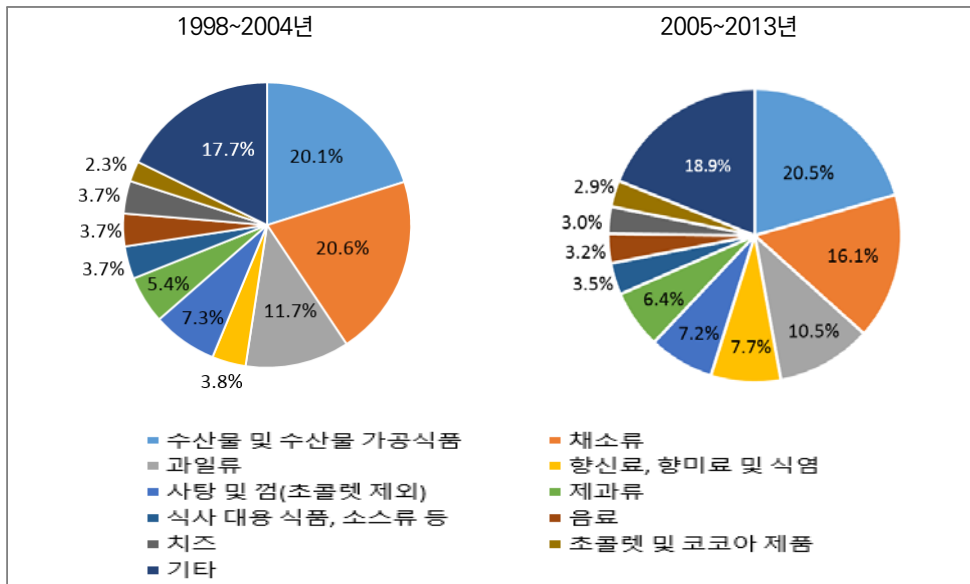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전체	190,897	217,549	217,067	231,763	241,261	6.0
김	51,259	67,300	70,917	71,512	70,331	8.2
이빨고기	26,195	25,720	24,512	30,156	37,341	9.3
오징어	20,110	13,374	14,574	16,292	17,850	△2.9
굴	5,648	15,255	13,584	18,146	16,460	30.7
넙치	7,677	9,861	11,922	13,833	15,363	18.9
참치	8,257	9,810	11,085	9,760	9,650	4.0
어묵	5,668	6,305	6,999	6,663	7,472	7.2
멸치	5,146	6,679	6,489	5,792	5,821	3.1
게살	7,335	8,351	6,954	5,880	5,555	△6.7
미역	5,816	5,431	5,253	6,319	4,959	△3.9
게	1,937	322	2,573	4,591	4,499	23.4
명태	1,868	2,016	1,963	1,938	2,814	10.8
골뱅이	1,825	2,887	2,649	2,402	2,690	10.2
소금	142	2,160	2,205	1,817	1,978	0.6
한천	1,096	1,580	1,555	1,393	1,774	93.3
기타	39,786	39,621	33,184	34,521	36,194	△2.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trass.or.kr>, 검색일 : 2017.4.30.)

2. 미국의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 식품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산물·수산물가공품으로 20.5%를 차지했다.¹⁰⁾

〈그림 2-1〉 미국 식품의약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규모 비교



자료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FDA Refusals of Imported Food Products by Country and Category, 2005~2013, 2016., p.10.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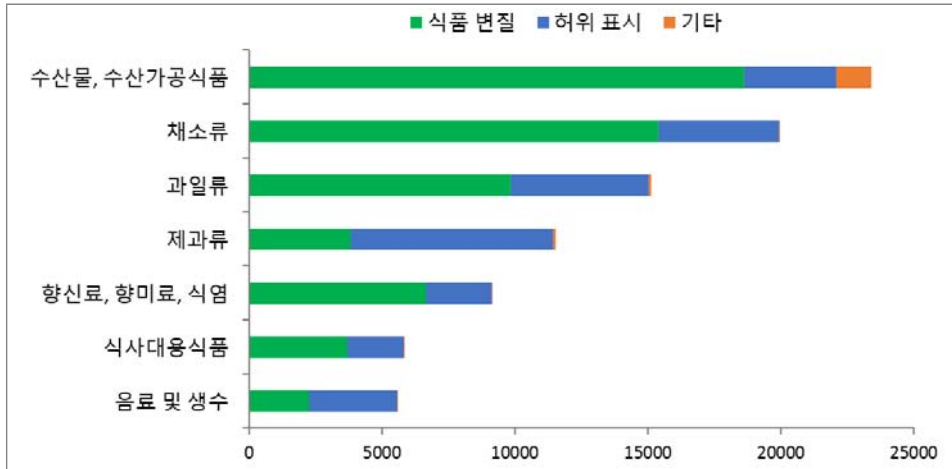
수산물·수산물가공품 통관거부 건수의 약 93.3%는 식품 변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제품 제조 및 유통 중에 혼입되는 불순물과 오물이 주요 원인이 된다.¹¹⁾

¹⁰⁾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FDA Refusals of Imported Food Products by Country and Category, 2005~2013, 2016., p.6.

¹¹⁾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FDA Refusals of Imported Food Products by Country and Category, 2005~2013, 2016., p.12. Figure 2 참조

세부적으로는 각종 병원체와 독소 생성으로 인한 부패 혹은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2-2〉 미국의 식품류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2005~2013년)



자료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FDA Refusals of Imported Food Products by Country and Category, 2005~2013, 2016., p.12. Figure 2

〈표 2-6〉 미국의 식품변질로 인한 통관거부 건수(2005~2013년)

분류	식품 변질			
	화학 물질	병원균/독소	기 타	전 체
수산물/수산가공식품	2,585	5,883	10,176	18,644
채소류	6,303	530	8,557	15,400
과일류	3,875	1,023	4,941	9,389
제과류	2,204	73	1,555	3,832
향신료, 향미료, 식염	1,335	3,794	1,545	6,673
식사대용식품, 소스류	288	91	33,316	3,695
음료, 생수	1,009	3	1,261	2,273
육류	10	79	54	143
달걀류	8	1	43	52

자료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FDA Refusals of Imported Food Products by Country and Category, 2005~2013, 2016., p.11. Table 3 일부 발췌

추가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통관거부 데이터베이스(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 OASIS)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국가별, 품목별 통관거부 동향은 표와 같다.

〈표 2-7〉 미국의 주요 수입 국가별 통관거부 현황(2012~2016년)

(단위 : 건, %)

순위	국가명	제품 수	비중	품 목(상위 3개) ¹²⁾
	전체	9,499	100.0	돔(26.6%), 참치(20.4%), 만새기(14.7%)
1	가이아나	1,646	17.3	참치(66.0%), 게(15.2%), 만새기(7.9%)
2	인도네시아	1,481	15.6	돔(67.2%), 바닷가재(31.8%), 명태(0.6%)
3	브라질	868	9.1	새우(84.3%), 어류제품(8.0%), 오징어(3.8%)
4	중국	616	6.5	돔(98.7%), 어류제품(1.2%), 기타어류(0.1%)
5	인도	548	5.8	새우(33.4%), 돔(14.2%), 참치(11.8%)
6	베트남	536	5.6	만새기(96.9%), 오징어(2.8%), 전복(0.3%)
7	말레이시아	513	5.4	어류제품(52.5%), 새우(46.5%), 멸치(0.8%)
8	미얀마	389	4.1	새우(19.6%), 틸라피아(18.5%), 오징어(10.7%)
9	방글라데시	297	3.1	만새기(59.4%), 새치(17.9%), 참치(11.6%)
10	페루	288	3.0	어류제품(88.6%), 새우(10.8%), 메기(0.3%)
13	한국	242	2.5	오징어(50.8%), 멸치(29.3%), 해조류(9.1%)

자료 : 미국 식품의약국 OASIS Report for Import Refusal Report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mportrefusals/>, 검색일 : 2017.4.11.)

국가별, 품목별 통관거부 현황을 보면 대체로 돔, 참치, 만새기(Mahi Mahi), 새우, 오징어 등의 비중이 높다. 미국 주요 수산물 품목인 연어, 틸라피아, 게 등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은 FSMA Section 204(d)(2)에 따라 지정된 고위험군 식품(High-risk foods, HRFs)에 해당되는 특정 식품군, 제조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¹³⁾ 이 때 식품군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질병 발발 기록을 바탕으로 미생물, 화학물질, 병원체 등에 의해 질병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다.

¹²⁾ 수산물의 경우 어종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원물과 가공품의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함

¹³⁾ 미국 식품의약국, FDA's Draft Approach for Designating High-Risk Foods as Required by Section 204 of FSMA, 2014. 02., p.1.

최근 5년간 통관거부 빈도가 높은 참치, 만새기, 정어리, 고등어 등은 적정 온도에서 냉장·냉동처리 및 보관되지 않은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히스타민균(Histamine)의 생성 우려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은 히스타민균 형성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 CCP)을 설정하고 관련 위해요소를 예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표 2-8〉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품목별 통관거부 현황(2012~2016년)

(단위 : 건, %)

어종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중(%)
전 체	319	190	2,211	3,644	3,135	9,499	100.0
돔	1	1	112	1,497	833	2,444	26.6
참치	5	16	232	365	639	1,257	20.4
만새기	9	36	113	147	460	765	14.7
어류제품	13	14	222	269	389	907	12.4
새우	8	26	555	773	350	1,712	11.2
오징어	3		150	30	75	258	2.4
문어	2	1	30	34	54	121	1.7
연어	1		21	35	50	107	1.6
틸라피아	6	8	100	109	47	270	1.5
게	21	2	127	161	36	347	1.1
멸치	45	6	88	55	35	229	1.1
새치		1	22	12	30	65	1.0
상어	2		3	2	20	27	0.6
정어리	82	4	23	13	20	142	0.6
고등어	63	12	10	4	15	104	0.5
명태	6		6	11	12	35	0.4
대구			1	1	10	12	0.3

자료 : 미국 식품의약품 OASIS Report for Import Refusal Report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mportrefusals/>, 검색일 : 2017.4.11.)

미국 식품의약품 OASIS 자료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 수산물 중 통관거부가 많

¹⁴⁾ Section 172.340(a)(1) Fish protein isolate,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이 이루어진 품목은 오징어류, 멸치류, 해조류 등으로, 주로 안전관련 규정 위반, 라벨링 위반 등이 원인으로 조사된다.

〈표 2-9〉 미국의 對한국 수산물 통관거부 현황(2014~2016년)

(단위 : 건, %)

어종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중(%)
전 체	217	12	13	242	100
오징어	119	4	-	124	51.2
멸치	64	4	3	71	29.3
해조류	21	-	1	22	9.1
- 마른김	16	-	-	16	6.6
- 미역	5	-	1	6	2.5
어류제품	5	1	2	8	3.3
- 어묵	-	1	-	1	0.4
- 소스류	3	-	-	3	1.2
- 스낵류	1	-	-	1	0.4
- 기타	1	-	2	3	1.2
게	3	1	2	6	2.5
쥐치	1	2	1	4	1.7
어류유지	-	-	3	3	1.2
가리비	1	-	-	1	0.4
고등어	1	-	-	1	0.4
굴	1	-	-	1	0.4
새우	1	-	-	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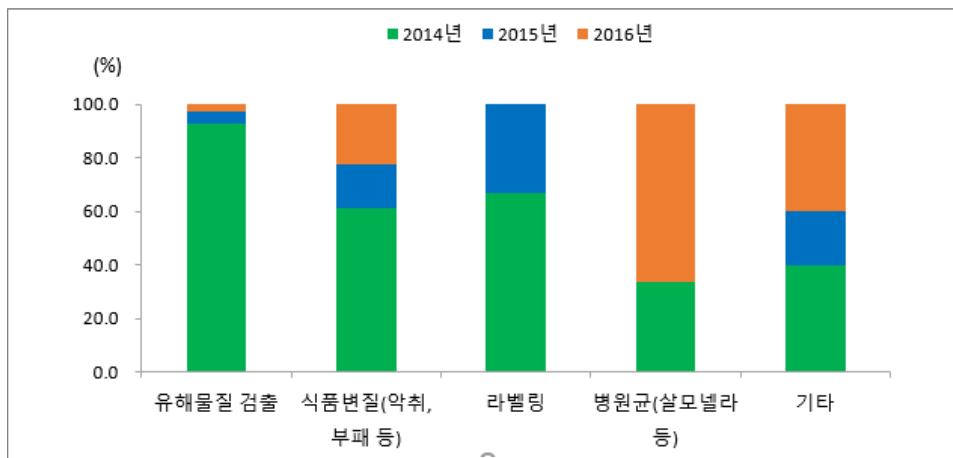
자료 : 미국 식품의약국 OASIS Report for Import Refusal Report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mportrefusals/>, 검색일 : 2017.4.11.)

미국은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단계에서의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 위생·안전 프로그램인 수산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을 제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 가공업체와 포장업체, 보관창고 소유주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수산물 수출에 있어 필수요건인 수산물 HACCP 기준 불충족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료를 참고할 때 안전 기준 미달에 따른 통관거부 중 오징

어류, 멸치류, 해조류의 경우 카드뮴, 납,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 화학 물질 등 금지성분의 기준치 초과로 인한 거부 사례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¹⁵⁾ 이 경우 금지 성분 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잔여물 코드로 부적합 조치를 받는다. 그 외 이 물질 발견과 비위생적인 가공방법으로 인한 거부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2-3〉 미국의 對한국 수산물 유형별 통관거부 유형



자료 : 미국 식품의약국 OASIS Report for Import Refusal Report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mportrefusals/>, 검색일 : 2017.4.11.)

라벨링 부적합에 의한 통관거부는 주로 영양성분표시, 원산지 또는 제조사, 상품의 표시문구(Claims)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알레르기 항원 미표시 등도 이에 해당된다. 넙치, 그루퍼, 대구, 농어 등이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서양 참다랑어와 남방 참다랑어 등에서 라벨링 부적합 판정¹⁶⁾이 많이 나타난다.

¹⁵⁾ 미국 식품의약국 OASIS Import Refusal Report,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mportrefusals/> (검색일 : 2017. 04. 11.) 참조 집계

¹⁶⁾ <https://www.newfoodmagazine.com/news/41625/fighting-food-fraud-testing-without-wait/>
(검색일 : 2016. 05. 17.)

제2절 중국의 수산물 교역 및 통관거부 동향

1. 중국의 수산물 수입 동향

1) 對세계 수산물 수입 동향

2006년 중국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13,462백만 달러에서 2016년 29,630백만 달러로 연평균 7.4% 증가하였다. 수출입 모두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 수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 2016년에는 11,127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산물 수입의 경우 2006년 4,269백만 달러에서 2016년 9,251백만 달러로 연평균 7.3% 가량 증가하였다.

〈표 2-10〉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6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06~2016)
교역규모	13,462	20,030	30,464	28,893	29,630	7.4
수 출	9,193	13,577	19,836	21,279	20,378	7.5
수 입	4,269	6,453	9,185	8,944	9,251	7.3
무역수지	4,924	7,124	12,094	11,006	11,127	-

자료 :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4.30.)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입 동향을 보면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많아 두 국가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페루, 캐나다,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순으로 수입액이 많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을 제외하면 수산물 수입 상위 10개국은 모두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로, 중국 수산물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1〉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국가(2014~2016년 평균)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전체	-	20,536	100.0	-	9,127	100.0
1	일본	3,636	17.7	러시아	1,375	15.1
2	미국	3,140	15.3	미국	1,305	14.3
3	홍콩	2,126	10.4	페루	993	10.9
4	한국	1,622	7.9	캐나다	542	5.9
5	대만	1,521	7.4	인도네시아	421	4.6
6	태국	1,079	5.3	노르웨이	409	4.5
7	말레이시아	644	3.1	뉴질랜드	406	4.4
8	필리핀	496	2.4	칠레	401	4.4
9	독일	493	2.4	태국	315	3.4
10	러시아	493	2.4	일본	271	3.0
∴	기타국가	5,287	25.7	기타국가	2,693	29.5

자료 :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4.30.)

품목별로는 연어가 775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명태, 새우, 대구, 오징어, 닭새우, 넙치, 소금, 바닷가재, 고등어 등의 순이다. 상위 10개 품목의 수산물 수입액은 4,622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0.6%를 차지하였다.

〈표 2-12〉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입 품목(2014~2016년 평균)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전체	-	20,536	100.0	-	9,127	100.0
1	오징어	2,609	12.7	연어	775	8.5
2	새우	2,511	12.2	명태	758	8.3
3	틸라피아	1,347	6.6	새우	697	7.6
4	뱀장어	966	4.7	대구	585	6.4
5	대구	912	4.4	오징어	469	5.1
6	참치	894	4.4	닭새우	389	4.3
7	명태	783	3.8	넙치	314	3.4
8	문어	590	2.9	소금	258	2.8
9	가리비	585	2.8	바닷가재	214	2.3
10	연어	580	2.8	고등어	163	1.8
∴	기타품목	8,759	42.7	기타품목	4,505	49.4

자료 :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4.30.)

2) 對한국 수산물 수입 동향

2012~2016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한국의 제1위 수산물 교역국이다. 같은 기간 평균 수출액은 중국이 348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16.4%를 차지하여 일본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對중 수산물 교역은 수입의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이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수산물 수출액은 377백만 달러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수산물 수입액은 2012년에 비해 13.2% 증가한 1,22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김이 68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용어류 37백만 달러(9.8%), 참치 34백만 달러(9.1%), 오징어 30백만 달러(8.0%) 등의 순이다.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표 2-13〉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수출	물량	126	143	120	119	126	0.04
	금액	372	370	309	313	377	0.3
수입	물량	822	907	904	802	830	0.2
	금액	1,083	1,026	1,175	1,158	1,226	2.5
무역수지(액)		△711	△656	△866	△849	△785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trass.or.kr>, 검색일 : 2017.4.30.)

〈표 2-14〉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전체	372	370	309	313	377	0.3
김	31	33	45	66	68	17.3
식용어류	9	8	8	17	37	31.4
삼치	20	28	14	25	34	11.5
오징어	40	71	39	38	30	△5.2
참치	23	20	17	20	30	5.2
대구	29	25	22	20	28	△0.7
어묵	2	7	13	21	23	64.2
전복	0	0	-	0	15	405.1
넙치	20	28	18	14	13	△8.5
명태	34	26	24	7	12	△18.7
기타품목	165	124	109	84	86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trass.or.kr>, 검색일 : 2017.4.30.)

2. 중국의 수산물 통관거부 동향

지역 경제 개방 확산의 기조 속에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新보호무역주의, 역사상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는 식품안전법 등은 對 중국 수출에 있어 대외환경에 대한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가 발표한 수입통관거부 실적을 바탕으로 2012~2016년까지 수산물 통관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60건이 발생하였다.¹⁷⁾

2012~2016년까지 수산물 통관거부 현황은 국가표준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 상품 증서 불합격, 서류미비, 식품변질, 라벨링 불합격, 관능검사 불합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⁸⁾ 집계 결과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이 전체 통관거부 사례의 59.2%인 4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 증서 불합격 118건(14.7%), 서류미비 79건(9.9%), 식품변질 39건(4.9%), 라벨링 불합격 35건(4.4%), 관능검사 불합격 26건(3.2%) 등의 순이었다.¹⁹⁾

통관거부 사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에 의한 거부 사례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 내 김이 138건으로 전체 비중의 29.1%를 차지하는 가운데 새우 46건(9.7%), 오징어 39건(8.2%), 연어 30건(6.3%), 어묵 28건(5.9%) 등의 순이다.²⁰⁾

17)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18) 기준치 초과 및 금지 성분 검출 유형: 식품 통관 시에 중국의 국가표준(GB)에 규정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금지성분 검출

상품 증서 불합격: 수출입자가 통관 시 제출한 서류와 실제 통관 시 운송되는 물품이 상이한 경우

서류미비: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라벨링 불합격: 중국 국가표준(GB)에 따라 라벨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식품변질과 관능검사 불합격: 검험검역국의 검역·검사 결과에 따른 거부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19)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표 2-16〉 중국의 수산물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에 따른 통관 거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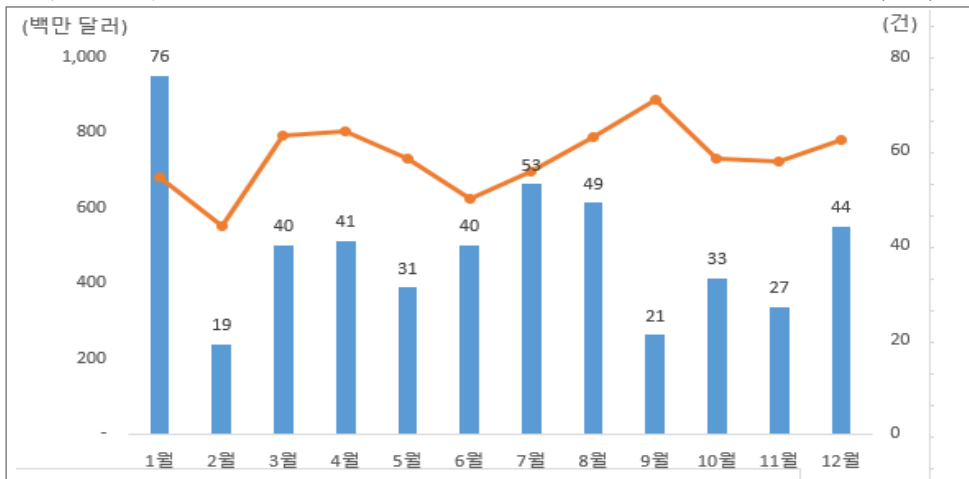
(단위 : 건, %)

국가	사례	비중	품목	사례	비중
한국	107	22.6	김	138	29.1
대만	65	13.7	새우	46	9.7
태국	57	12.0	오징어	39	8.2
노르웨이	37	7.8	연어	30	6.3
말레이시아·베트남	24	5.1	어묵	28	5.9

자료 :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의 경우 균락총수 기준 초과로 인한 통관거부가 12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장균 기준치 초과 49건(10.3%), 카드뮴 기준치 초과 48건(10.1%), 휘발성 염기 질소 기준치 초과 26건(5.5%), 리스테리아균 검출 18건(3.8%) 등의 순이었다.²¹⁾

〈그림 2-4〉 중국의 수산물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에 따른 통관거부 현황(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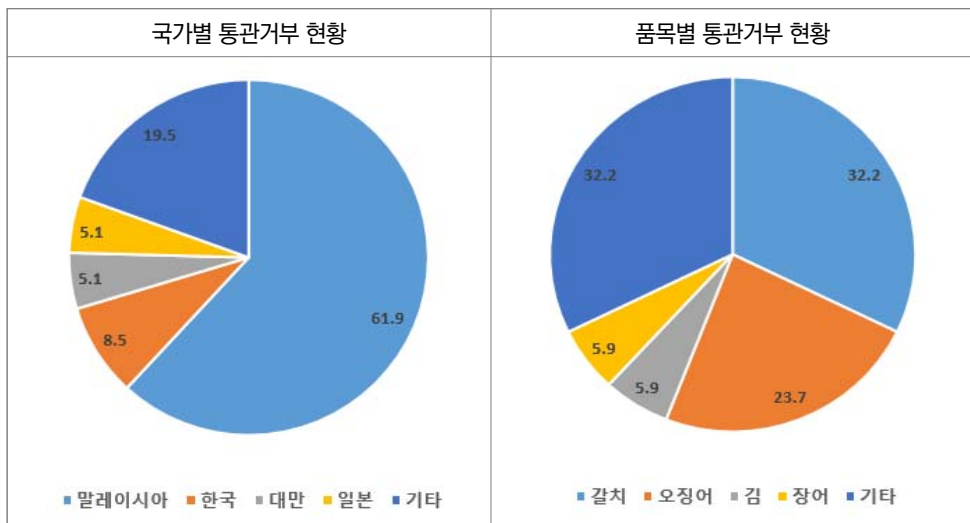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7.4.30.),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20)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21)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상품 증서 불합격은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 다음으로 통관거부 빈도가 높은 유형이다. 2012~2016년 총 118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 8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말레이시아산 갈치, 오징어류에 대해 이루어진 집중 검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²²⁾

〈그림 2-5〉 중국의 수산물 상품 증서 불합격 현황



자료 :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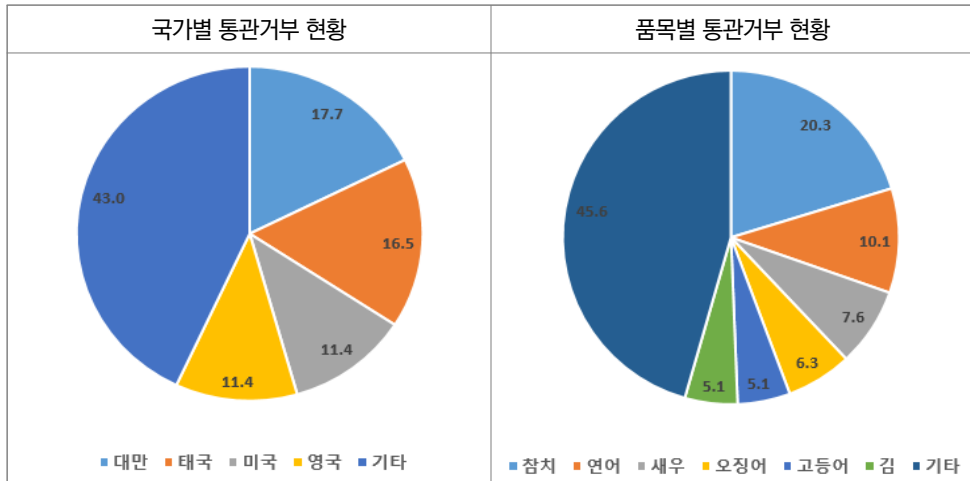
서류미비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는 참치가 16건으로 통관거부 빈도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연어 8건(10.1%), 새우 6건(7.6%), 오징어 5건(6.3%), 김과 고등어는 4건(5.1%) 등의 순이었다.²³⁾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증서 미제출(43건), 검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6건), 수산물 검역 증명서 미비(5건) 등이었다.²⁴⁾

22)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23)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24)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그림 2-6〉 중국의 수산물 서류미비 불합격 현황



자료 :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 통관거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재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거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로 인한 거부 사례가 전체의 77.0%이며, 다음으로 관능 검역 불합격 10.1%, 상품 증서 불합격 7.2% 등이었다.²⁵⁾

기준치 초과 및 금지성분 검출로 인해 거부되는 품목은 김이 93건으로 전체 품목의 86.9%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 참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가 79건²⁶⁾, 대장균(13건), 무기비소, 벤조피렌, 비소 검출에 따른 것이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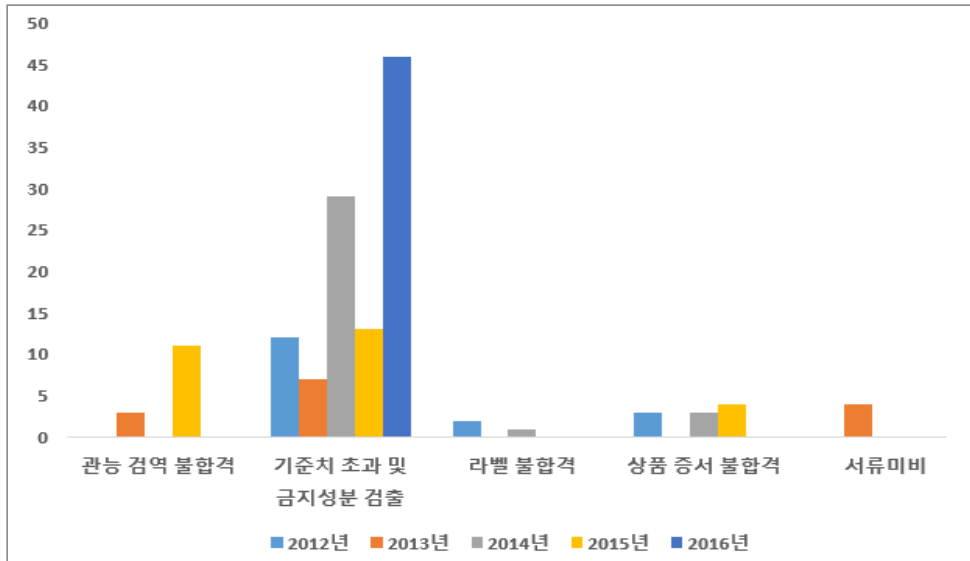
2017.3.25.)

25)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26) 품목별 통관거부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으로 계산함

27)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그림 2-7〉 중국의 對한국 수산물 유형별 통관거부 현황



자료 :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관능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는 주로 참치(가다랑어)와 고등어에서, 상품 증서 불합격은 김, 고등어, 굴, 참치, 오징어 등에서 확인되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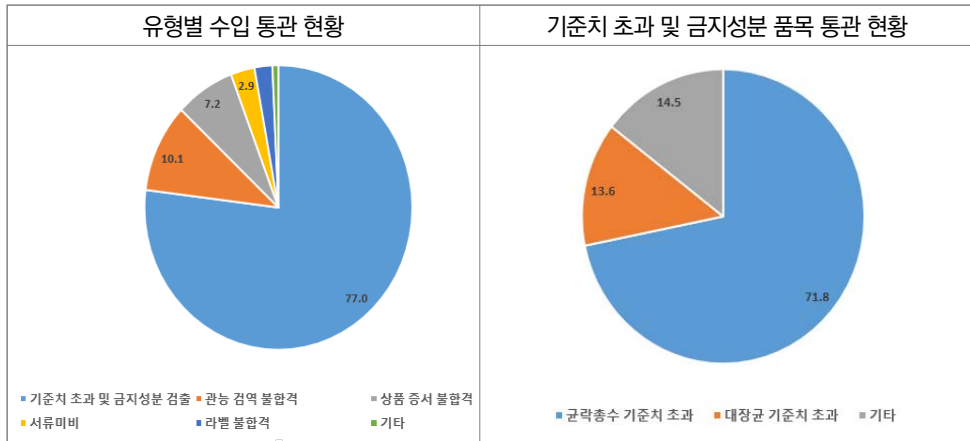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對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김의 통관거부가 많은 편이었으며, 참치 13건(9.4%), 오징어와 고등어가 각각 4건(2.9%) 등의 순이었다.²⁹⁾ 김의 통관거부 사유는 균락 총수 기준치 초과로 인한 사례가 92건이며 다음으로 상품 증서 불합격 및 라벨링 불합격에 따른 통관거부가 많았다.³⁰⁾

28)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29)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30)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그림 2-8〉 중국의 수산물 유형별 통관 현황 및 기준치 초과·금지성분 유형별 통관 현황



주 : 품목별 통관거부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으로 계산함

자료 : 중국품질검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저자 집계(<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검색일 : 2017.3.25.)

제3장

미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실태 분석 《

제1절 미국 수산물 수입 관련 주요 제도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에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국은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관할하는 육류, 가금류, 난제품류 및 메기목 어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식품 역시 식품의약국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식품의약국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은 해당 식품이 미국산인지 수입산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어 때때로 우리 수산물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이 관할하는 식품과 관련된 제도는 미국 연방법전 Title 21, Chapter 9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 이하 ‘FDCA’)」에 규정되어 있다. FDCA는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등 기술규정을 포함하여 식품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 수산물에 적용되는 규정에는 대표적으로는 ‘식품 시설물 등록’, ‘식품 수입 사전 신고’, ‘기록물 관리 및 보관’, ‘행정 역류 조치’,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이하 ‘HACCP’)', ‘패류 위생프로그램’, ‘식품 영양성분표시’ 등이 있다. 이 중 수산물과 직접 관련된 제도는 HACCP과 패류 위생프로그램이며, 그 외 조치들은 수산물을 포함한 일반 식품에 적용된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과 탄저균 사건 이후 식품에 의한 테러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부시 행정부는 「공중보건보장과 바이오테러대비 및

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이하 ‘바이오테러법’)³¹⁾을 통과시켰다. 바이오테러법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국내외 모든 식품 시설물을 식품의약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식품 수입에 있어 사전신고 제도를 의무화하였다.³²⁾ 이와 더불어 식품과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 의무를 대폭 강화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국에 해당 식품을 행정억류를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규제들은 현재까지도 FDCA의 주요 수입 수산물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³³⁾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식품 공급의 안전성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하였다.³⁴⁾ 193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식품안전체계의 개혁으로 평가되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목적은 식품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체제의 구축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바이오테러법에서 요구되던 식품 시설물 등록 의무, 사전 신고제도, 기록물 관리 및 보관의무, 행정억류 등의 조치를 보다 강화하였고, 수산물과 주스 등에 관한 HACCP에서 요구되던 위해요소와 관련된 사전 예방 조치들도 모든 식품에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였다.³⁵⁾ 식품안전현대화법과 관련된 하위 규칙들은 현재 대부분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산물 수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1996년 제정된 수산물에 관한 미국의 HACCP 규정이다. HACCP은 수산물 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

31) 워싱턴 주 농무부,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https://agr.wa.gov/foodsecurity/thebioterrorismact.aspx>(검색일 : 2017.6.9)

32) 워싱턴 주 농무부,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https://agr.wa.gov/foodsecurity/thebioterrorismact.aspx>(검색일 : 2017.6.9)

33) 워싱턴 주 농무부,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https://agr.wa.gov/foodsecurity/thebioterrorismact.aspx>(검색일 : 2017.6.9)

34) Jacqueline Kohak, 「FSMA Era Opens with Uncertainties for Seafood」. 『Food Safety Magazine』 2012.12/2013.01

35) Jacqueline Kohak, 「FSMA Era Opens with Uncertainties for Seafood」. 『Food Safety Magazine』 2012.12/2013.01

소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러한 위해요소를 경감·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가공업자 스스로 규칙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³⁶⁾ 식품의약국은 가공업자들이 스스로 각 어종 및 공정별로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³⁷⁾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발효가 갖는 의미는 기존에 수산물에만 적용되던 HACCP 시스템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위해요소 및 위험기반예방관리(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이하 ‘HARPC’)에 기반을 두고 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데, HARPC는 업체 스스로가 위해요소를 평가·관리하고 이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HACCP와 매우 유사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식품안전현대화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에 관한 부분은 수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이 HACCP에 관한 유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수산물에 적용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현 상황에서 보았을 때 미국 식품의약국 규제 중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 HACCP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는 식품의약국이 최근 HACCP 위반과 관련해 수많은 수입경보 조치를 발동하면서 관련된 수산물을 역류하고 있는데, 미국 HACCP 규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HACCP 위반의 경우 해당 제품 뿐 아니라 해당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 제품에 대해 수입경보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HACCP은 아직까지도 국내 수산물 수출의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의약국과 더불어 수산물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미국 상무

36) Federal Register, 『Procedures for the Safe and Sanitary Processing and Import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60 Fed. Reg. 68096, 1996. 02. 16., p.65097

37) Federal Register, 『Procedures for the Safe and Sanitary Processing and Import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60 Fed. Reg. 68096, 1996. 02. 16., p.65097

38) FSMA의 발효로 인해 일반 식품에 대한 식품의약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일반 식품을 수산물에 비해 강하게 규제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에 HHS는 수산물 HACCP 규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다. 해양대기국은 전신인 미국 해안연구소, 미국기상국, 미국어류수산조합을 통합하여 1970년에 미국의 첫 번째 자연과학 연구기관으로 출범하였다.³⁹⁾ 산하기관으로는 미국 해양어업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 NMFS 혹은 NOAA Fisheries), 미국 해양청(National Oceanic Services), 미국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미국 환경위성자료정보청(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해양대기연구소(Office of Oceanic and Atmospheric Research) 및 해상항공작전사무소(Office of Marine & Aviation Operations)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어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해양어업청에서 규제하고 있다.⁴⁰⁾

미국 해양어업청은 해양자원 관리에 관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남획, 멸종, 서식지 훼손 등과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¹⁾ 미국 해양어업청은 「매그너슨-스티븐 어업 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MSA, 이하 ‘어업보존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을 평가·예측하고, 해양 어업에서의 남획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⁴²⁾ 동시에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과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연어, 고래, 바다거북과 같은 보호종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⁴³⁾

어업보존관리법은 미국 연방 수역 내 어업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규제로 미국 수산업이 자국의 해양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³⁹⁾ 미국 해양대기국, NOAA Legacy, <http://www.history.noaa.gov/noaa.html>(검색일 : 2017.6.7.); NOAA. (n.d.). In Wikipedia. Retrieved March 27, 2017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Oceanic_and_Atmospheric_Administration

⁴⁰⁾ 미국 해양대기국, NOAA Legacy, <http://www.history.noaa.gov/noaa.html>(검색일 : 2017.6.7.); NOAA. (n.d.). In Wikipedia. Retrieved March 27, 2017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Oceanic_and_Atmospheric_Administration

⁴¹⁾ 미국 해양어업청, Our Mission, <https://www.fisheries.noaa.gov/about-us>(검색일 : 2017.6.7.)

⁴²⁾ 미국 해양어업청, Our Mission, <https://www.fisheries.noaa.gov/about-us>(검색일 : 2017.6.7.)

⁴³⁾ 미국 해양어업청, Our Mission, <https://www.fisheries.noaa.gov/about-us>(검색일 : 2017.6.7.)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⁴⁴⁾ 동법은 연간 허용 어획량, 어구 및 어기 제한 등 어업 활동에 관한 제한과 더불어 남극해양 자원, 참치 자원, 고도회유성 어족 자원, 해양포유류 자원, 기타 보호 어종과 관련된 각종 추적 및 검증 프로그램, 무역허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⁵⁾ 2016년 12월 8일 미국 해양어업청은 어업보존관리법에 근거하여 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에 특별히 취약한 수산물에 관한 수입 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해 동 규제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⁴⁶⁾

1972년 닉슨 행정부는 사냥, 사살, 포획, 학대 등을 통해 해양포유류를 득하거나 수출입,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였다.⁴⁷⁾ 해양포유류보호법과 관련된 관계 부처의 권한은 미국 내무부와 상무부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 중 해달, 바다수달, 바다코끼리, 북극곰, 매너티, 듀공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의 어류 및 야생동물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관장하고, 물개, 바다사자를 포함한 기각류와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류는 상무부 해양대기국의 해양어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⁴⁸⁾

최근 해양포유류보호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는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포유류보호법상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입 조건(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44) 미국 해양어업청, Magnuson-Stevens Fisheries Conservation & Management Act, http://www.westcoast.fisheries.noaa.gov/whatwedo/msa/magnuson_stevens_act.html(검색일 : 2017.6.7.)

45) 미국 해양어업청, Magnuson-Stevens Fisheries Conservation & Management Act, http://www.westcoast.fisheries.noaa.gov/whatwedo/msa/magnuson_stevens_act.html(검색일 : 2017.6.7.)

46)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 12. 09., p.88975

47) 미국 해양어업청, Regulations to Implement Import Restrictions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2016. 09, http://www.pcouncil.org/wp-content/uploads/2017/02/J1a_NMFS_Rpt2_Regs_MMPA_ElectricOnly_Mar2017BB.pdf(검색일: 2017.3.17.)

48) 미국 해양어업청, Marine Mammals, <http://www.nmfs.noaa.gov/pr/species/mammals/>(검색일: 2017.4.30.); Marine Mammal. (n.d.). In Wikipedia. Retrieved April 30, 2017 from https://en.wikipedia.org/wiki/Marine_Mammal_Protection_Act

Protection Act, 이하 ‘해양포유류보호법상 수산물 수입 조건’)이다. 해양어업청은 이에 근거하여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 이행에 관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규칙을 제정하여 동 규칙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⁴⁹⁾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의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이 거절된다.⁵⁰⁾

이상의 규제들 중 가까운 장래에 시행이 확실시되어 국내적 대응이 필요한 규제는 해양대기국의 해양포유류 보호와 관련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IUU어업 및 원산지 세탁과 관련된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이다. 전자의 규제는 2021년까지 해양포유류 보호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도입 또는 관련 입법이 수반되어야만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2017년까지 어업목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미국 해양어업청에 제출해야하므로 기간 내에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3-1〉 미국 수산물·수산식품 수입 관련 규제 제도

기관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식품의약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Title 21, Chapter 9) - Subchapter IV 식품 (§§341~351I-1) - Subchapter VIII 식품 수출입 (§§381~384e)	식품의약국 규정 (Title 21, Chapter 1) - 식품 관련 규정 Subchapter B (Part 100~199)
해양대기국	해양포유류보호법 (Title 16, Chapter 31) 멸종위기종보호법 (Title 16, Chapter 35) 어업보존 및 관리법 (Title 16, Chapter 38)	야생동물 및 수산업 관련 규정 (Title 50) - 미국해양어업청 규정 (Chapter II) - 국제어업 및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정 (Chapter III) - 공동 규제 및 멸종위기종에 관한 규정 (Chapter IV) - 어업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Chapter VI)
농무부	가금류 관련 규정 (Title 21, Chapter 10) 육류 관련 규정 (Title 21, Chapter 12) 난제품류 관련 규정 (Title 21, Chapter 15)	동물성 식품 관련 규정 (Title 9) - 메기류 포함

주 : 연방 법률 체계를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세부 규정은 산재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분류방법이 존재
자료 : 저자 정리

49)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1.

50)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1.

제2절 주요 비관세장벽 분석

1.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

1) 해양포유류보호법상 수산물 수입 조건 연구 배경

미국 연방 해양포유류보호법 Sec.101(a)(2)은 미국의 기준을 초과해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對미 수산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어업이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합리적인 증명을 제출해야한다.⁵¹⁾ 동법 Sec.102(c)(3)은 각국의 어업이 실제로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양대기국이 금지한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어획한 경우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한 방법이란 어업 과정에서 과도하게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5일,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와 거북섬복원네트워크(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가 새치류 어업과 관련하여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 이행에 관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새치류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청원을 미국 상무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해양대기국은 관련 입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6년 8월 15일 해양포유류보호법상의 수산물 수입 조건에 관한 시행규칙(50 CFR 216.3, 50 CFR 216.24)을 공포했다.⁵²⁾ 의

⁵¹⁾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101(a)(2) –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ban the importation** of commercial fish or products from fish which have been caught with commercial fishing technology which results in the incidental **kill of incidental serious injury of ocean mammals in excess of United States standards**. For purposes of applying the preceding sentence, the Secretary [of Commerce] –

(A) **shall insist on reasonable proof** from the government of any nation from which fish or fish products will be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of the effect on ocean mammals of the commercial fishing technology in use for such fish or fish products exported from such nation to the United States.

전수령 과정에서 2008년 청원보다 그 범위가 넓혀져 새치류 뿐 아니라 수산물 및 수산식품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동 규칙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⁵³⁾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조건에 관한 시행규칙의 발효로 2021년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내 어업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제도를 갖고 있음에 관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對미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무역 상대국에 다소 무리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국은 이미 자국 어업에 관해 높은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대상 어업(대서양 연안 유자망 어업)을 폐쇄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⁵⁴⁾

2) 해양포유류보호법상 수산물 수입 조건 주요 내용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조건에 관한 시행규칙의 발효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해외어업목록(List of Foreign Fisheries: LFF)의 작성을 위한 해양어업청의 자료 요청이다. 해양어업청은 우선 미국으로 수산물·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어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목록, 즉 해외어업목록을 작성하는데, 이를 위해 對미 수산물 수출국에게 ①어업인 수, 선박 수, 어구 형태, 대상 어종, 어업 해역, 어업 시기 등 해당 국가의 상업적 어업과 관련된 정보, ②해양포유류 개체 수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사망 및 심각한 부상 빈도와 관련된 정보, ③부수적인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감소하고 의도적인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결정, 규칙 또는 조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⁵⁵⁾

52)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81 Fed. Reg. 54390, 2016. 08. 15., p.54390.

53)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81 Fed. Reg. 54390, 2016. 08. 15., p.54390.

54) 손호선·목정임·최영민·박겸준,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31(2), 2016., p.150.

55)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해양어업청은 2017년과 2021년 해외어업목록을 작성하고, 이후에는 매 4년마다 새로운 해외어업목록을 작성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는 90일 이내에 위 정보를 미국 해양어업청에 제출해야 한다.⁵⁶⁾

해양어업청은 해외어업목록을 바탕으로 각국의 어업을 해양포유류에 대한 영향에 따라 수출어업(export fishery)과 면제어업(except fishery)으로 분류한다. 수출어업이란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어업이 어업 과정에서 부수적인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more than remote likelihood) 있는 경우를 말한다. 면제어업은 어업 과정에서 부수적인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remote likelihood) 경우로, 이 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란 해당 어업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포유류의 연간 혼획량이 부수어획량 제한(bycatch limit)의 10% 이내이거나 부수어획량 제한의 1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어업의 부수어획량이 1% 이내일 경우를 말한다.⁵⁷⁾

해외어업목록을 작성하고 각 어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 해양어업청은 각 조업국이 제출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⁵⁸⁾ 즉, 조업국이 부수어획량(level of bycatch)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어업기술, 사용된 어구, 해양포유류의 어획 억제를 위한 조치, 대상 어종, 어업 시기, 어업 해역, 로그북 등을 통한 정성적 자료와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의 종류와 개체 수, 기타 요인을 고려해 해당 어업이 면제어업인지 수출어업인지 구분한다.⁵⁹⁾ 이 과정에서 미국 어업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를 통해 유추하고, 유추할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수출어업으로 분류한다.⁶⁰⁾

81 Fed. Reg. 54390, 2016. 08. 15., p.54391.

⁵⁶⁾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81 Fed. Reg. 54390, 2016. 08. 15., p.54391.

⁵⁷⁾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81 Fed. Reg. 54390, 2016. 08. 15., p.54396, Comment 3

⁵⁸⁾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3, ¶ 2

⁵⁹⁾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3, ¶ 2

수출어업 및 면제어업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각 어업의 동등성 평가(comparability finding)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등성 평가란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이 그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동등성 평가에서 동등성이 부인되는 경우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다.⁶¹⁾

수출어업의 경우 해당 국가가 해양포유류의 부수적인 어획을 감소시키기 위한 미국의 규제 프로그램과 그 효율성면에서 동등한(comparable in effectiveness) 규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⁶²⁾ 면제어업의 경우에는 부수어획의 가능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관해 미국과 효율성 면에서 동등한 규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어업 과정에서 ‘의도적인’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금지했음에 관해서, 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해양포유류의 의도적인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어업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에 관해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는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⁶³⁾

동등성 평가는 수출어업과 면제어업 모두에 필요하지만 면제어업의 경우에는 부수어획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의도적인’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에 관해서만 동등성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동등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동등성이 부인된 어업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3) 시사점

해양대기국은 각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對미 수산물 수출국들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을

⁶⁰⁾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3, ¶ 2

⁶¹⁾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3, ¶ 2

⁶²⁾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3, ¶ 3

⁶³⁾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p.3, ¶ 3

수립해야 하는데, 향후 수립된 프로그램의 동등성이 부인되는 경우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신중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14~2016년간 우리나라의 對미 수산물 수출을 살펴보면 김, 이빨고기, 오징어, 굴, 넙치 등 상위 5개 품목이 수출액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6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품목은 80% 가까이 차지했다.

〈표 3-2〉 2014~2016년 對미 수산물 수출 평균액 및 품목별 비중

(단위 : 톤,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평균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합계	30,804	230,030	100	100
1	김	4,420	70,920	14.3	30.8
2	이빨고기	1,264	30,670	4.1	13.3
3	오징어	8,394	16,238	27.2	7.1
4	굴	2,523	16,063	8.2	7.0
5	넙치	666	13,706	2.2	6.0
6	참치	974	10,165	3.2	4.4
7	어묵	2,225	7,044	7.2	3.1
8	게살	763	6,129	2.5	2.7
9	멸치	508	6,034	1.6	2.6
10	미역	1,240	5,511	4.0	2.4
11	게	112	3,888	0.4	1.7
12	굴뱅이	255	2,580	0.8	1.1
13	명태	490	2,238	1.6	1.0
14	소금	1,601	2,210	5.2	1.0
15	한천	84	2,000	0.3	0.9
16	어류가공품	486	1,742	1.6	0.8
17	고등어	508	1,615	1.6	0.7
18	꽁치	969	1,574	3.1	0.7
19	다시마	183	1,389	0.6	0.6
20	캐비아	53	1,107	0.2	0.5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www.trass.or.kr>, 검색일 : 2017.4.30.)

품목별 어업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김의 99.9%, 굴의 93.6%, 넙치의 92.0%, 미역의 99.1%가 양식어업을 통해 생산되며 전체 對미 수출액 중 상위 10개 품목의 양식어업 생산 비중은 45.2%를 차지한다. 이빨고기는

100%, 오징어는 43.3%, 다랑어는 99.2%, 새치류는 100% 원양어업을 통해 생산되며 전체 對미 수출액 중 상위 10개 품목의 원양어업 생산 비중은 20.8%이다. 오징어의 56.7%, 굴의 6.4%, 넙치의 8%, 다랑어의 0.8%, 게살과 멸치 100%, 미역 0.9%는 해면어업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對미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해면어업 생산 비중은 10.3%이다.

〈표 3-3〉 2014~2016년 對미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 어업별 비중

(단위 : %)

순위	품목명	수출 금액 비중	어업별 비중		
			양식어업	원양어업	해면어업
	총합계	79.3	45.2	20.8	10.3
1	김	30.8	99.9	-	0.0
2	이빨고기	13.3	-	100.0	-
3	오징어	7.1	-	43.3	56.7
4	굴	7.0	93.6	-	6.4
5	넙치	6.0	92.0	0.0	8.0
6	다랑어	4.4	-	99.2	0.8
	새치	0.0	-	100.0	-
7	어묵	3.1	(수입 재수출)		
8	게살	2.7	-	-	100.0
9	멸치	2.6	-	-	100.0
10	미역	2.4	99.1	-	0.9

자료 :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참조 저자 집계(<http://kosis.kr>, 검색일: 2017.5.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10대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對미 수출 수산물의 45.2%는 양식어업을 통해, 20.8%는 원양어업에서 10.3%는 해면어업을 통해 생산된다.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 수산물의 절반 가까이가 양식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것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양식어업에도 해양포유류보호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해양포유류보호법에서 말하는 어업이란 해양포유류와 접촉하거나 해양포유류 서식지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 어업 활동을 말하므로, 해양어업청은 양식업이 담수에서 이

루어지거나 해양포유류의 서식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⁶⁴⁾ 이에 따라 해면 양식어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양식업이 해양포유류와 접촉하거나 해양포유류 서식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입증해 해양포유류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상업적 어업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당 어업은 이번에 개정된 해양포유류법상의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 양식업이 해양포유류와 접촉하거나 해양포유류 서식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원양어업이나 해면어업과 같이 양식업 이외의 어업인 경우에는 면제어업으로 분류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즉, 해당 어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양포유류의 연간 혼획량이 부수어획 제한량의 10% 이내이거나, 전체 혼획량이 부수어획량 제한의 1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어업의 부수어획량이 1% 이내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수출어업으로 분류되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규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는 국내 입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면제어업으로 분류되는 편이 유리하다.

면제어업의 경우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1994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해양포유류 사망률 0% 달성 목표, 어업목록의 작성, 해양포유류 사망 또는 부상 시 보고 의무 부과, 허가 요건, 어업목록 I, II에 대한 선상 감독 권한, 사망감측팀 구축 및 어업목록 I, II에 대한 사망감측계획 수립,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에 따른 해양포유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⁶⁵⁾ 이들 규정은 미국 연방법전 Title 16의 Sec. 117과 118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미국 연방규정집 Title 50의 Part 229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역과 어종에 따른 어구에 관한 요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연방규정집 Title 50의 Part 229.31~37은 태평양 연안 고래목에 대한 사망

⁶⁴⁾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81 Fed. Reg. 54390, 2016. 08. 15., p.54396, Comment 8

⁶⁵⁾ 미국 해양어업청, <http://www.nmfs.noaa.gov/pr/interactions/> (검색일 : 2017.6.9.)

감축 계획(\$229.31), 대서양 큰고래 사망 감축 계획(\$229.32), 뉴잉글랜드 및 동부 연안의 쥐돌고래(Harbor Porpoise) 사망 감축 계획, 병코돌고래(Botlenose Dolphine) 사망 감축 계획(\$229.33, \$229.34), 대서양 원양 연승 어업 사망 감축 계획(\$229.36), 흑범고래 사망 감축 계획(\$229.37)을 담고 있는데, 이 중 특히 우려가 되는 규정은 대서양 연승 어업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북위 35도, 서경 75도, 북위 25도, 서경 35도에 이르는 지역(CHSRA)에서 연승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어업청에 출항 48시간에서 96시간 이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⁶⁶⁾ 이 때 해양어업청은 특별 감시관 파견 여부를 알려주는데, 특별 감시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업인은 반드시 감시관을 배에 승선시켜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업이 금지된다.⁶⁷⁾ 특별 감시관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과학적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며, 조업인에게 어업 행위 및 어구에 관해 수정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HSRA를 포함하여 대서양 중부의 만곡부에서는 길이가 20해리(37.04 km)를 초과하는 연승어선은 사용할 수 없는데,⁶⁸⁾ 對미 수출국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해야 연승어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6가지 제도를 더 두고 있는데 태평양 연안 고래목에 대한 사망 감축 계획의 경우 5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 사이 캘리포니아 또는 오리건 주 연안 및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유자망어선(Drift gillnet fishing vessel)에 적용된다.⁶⁹⁾ 이 때 부표줄은 최소 6 pathom(36 ft; 10.9m)이어야 하고, 음향장치(핑거)는 10 kHz(± 2 kHz), 132 dB(± 4 dB)로 1m에서 micropascal, 0.3초(± 0.015 초) 이상 출력이 지속되고 매 4초(± 0.2 초) 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또한 100 fathoms(600 ft; 182.88m)

⁶⁶⁾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50, Part 229, §229.36(Atlantic Pelagic Longline Take Reduction Plan)

⁶⁷⁾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50, Part 229, §229.36(Atlantic Pelagic Longline Take Reduction Plan)

⁶⁸⁾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50, Part 229, §229.36(Atlantic Pelagic Longline Take Reduction Plan)

⁶⁹⁾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50, Part 229, §229.31(Pacific Offshore Cetacean Take Reduction Plan); 이외에 해역별 어종에 관한 어구 제한은 각 규정(§229.32-37)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에서도 작동해야 하며, 뜰줄의 30 ft(9.14m) 이내에 매달되, 300 ft(91.44m) 이상 떨어져 있지 않고, 측연선의 36 ft(10.97m) 이내에 매달되, 300 ft(91.44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음향장치를 매달은 뜰줄과 측연선 사이 수평 거리가 150 ft(45.5m) 이내이어야 한다.⁷⁰⁾

향후 국내 수출어업과 관련하여 도입되어야 하는 규정은 미국의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효율성 면에서는 동등해야 한다.⁷¹⁾ 참고로 미국은 부수어획량 산정을 위해 생물학적허용사망량(Potential Biological Removal: PBR)⁷²⁾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해당 생물에 대한 전체 PBR이 10% 이하인 경우 및 PBR이 1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어업에서 초래하는 양이 1% 이내인 경우를 어업목록 I, 전체 PBR이 10%를 초과하고 해당 어업의 PBR이 1~50%인 경우를 어업목록 II, 전체 PBR이 10%를 초과하고 해당 어업의 PBR이 50% 이상인 경우를 어업목록 III으로 구분하고 있다.⁷³⁾ 즉, 미국의 어업목록 I과 II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에서 정하는 해외어업목록의 수출어업과 어업목록 III은 해외어업목록의 면제어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해양어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오징어와 멸치 어업의 경우 모두 어업목록 III으로, 참치와 게 어업의 경우 II와 III으로 분류되어 있다.⁷⁴⁾

한국과 미국의 해양 환경, 어선, 어구, 관련 규제 등이 상이해 미국의 어업목록 분류 결과가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 국내 어업목록 분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어업이 미국에서 수출어업과 면제어업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될지 예측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50, Part 229, §229.31(Pacific Offshore Cetacean Take Reduction Plan); 이외에 해역별 어종에 관한 어구 제한은 각 규정(§229.32-37)에서 확인할 수 있음

71) 이와 관련된 절차는 16 U.S.C. 1386에 규정됨

72) 생물학적허용사망량이란 자연 사망량을 제외한 포획, 혼획, 선박충돌 등 모든 비자연사망량을 더한 값을 의미한다. 손호선·목정임·최영민·박겸준,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31(2), 2016., p.107.

73) 미국 해양어업청,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List of Fisheries”, <http://www.nmfs.noaa.gov/pr/interactions/fisheries/lof.html>(검색일 : 2017.4.17.)

74) 미국 해양어업청,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List of Fisheries”, <http://www.nmfs.noaa.gov/pr/interactions/fisheries/lof.html>(검색일 : 2017.4.17.)

2. 어업 관련 정보 역추적 불가 수산물 수입거부 조치

1)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연구 배경

2014년 6월 16일 백악관은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과 수산물 원산지 세탁(Seafood Fraud) 근절을 위한 대통령 전담반을 만들었다. 12개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전담반은 이듬해 3월, IUU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세탁 근절을 위한 포괄적 기구 수립을 위한 15개의 제안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전담반은 향후 국가해양위원회 산하 IUU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세탁에 관한 위원회(NOC 위원회)로 재편성되어 사업계획에 담긴 15개 제안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 제안 14호와 15호가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로 발전하여 2016년 12월 8일 해양대기국 시행규칙으로 입법화되었다.⁷⁵⁾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에 관한 해양대기국의 시행규칙은 2017년 1월 9일 발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양어업청은 수입 수산물의 생산부터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역추적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결국 국내 수출자가 미국 내 수입자에 제공해야 하므로 국내 업체의 對미 수출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주요 내용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업보존관리법이다. 이 법 Sec. 1857은 국가 간 혹은 외국 무역에서 외국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구속력 있는 보전 조치를 위반하여 어획, 보유, 운반 또는 판매된 수산물의 수입과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⁷⁶⁾

⁷⁵⁾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 12. 09., p.88976; NOAA Fisheries, 『U.S.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Fact Sheet』, 2016. 12. 08.

⁷⁶⁾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MSA) §1857 - It is unlawful - (1)(Q) to import, export, transport, sell, receive, acquire, or purchase in interstate or foreign

이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8일 해양대기국은 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에 특별히 취약한 수산물의 수입의 허용, 보고, 기록물보관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는 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에 특히 취약한 수산물·수산식품(이하, 대상 수산물)을 정하고 이러한 대상 수산물을 수입할 때 허가·보고·기록물보관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대기국은 현재 IUU 어업으로 인한 멸종 위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수산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향후 가능한 한 모든 수산물로 동 규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⁷⁷⁾ 對미 수출 수산물의 어획부터 통관에 이르는 정보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수산물 수입 시 수입업체는 다음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표 3-4〉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에서 수입자에 요구하는 정보

생산자에 관한 정보
선박의 명칭, 기국 및 어업허가에 관한 증명: 선박 고유 식별 번호(Unique Vessel Identifier)가 있는 경우 그 번호; 어구의 종류; 양식시설 명칭
어획·가공된 수산물에 관한 정보
어종(ASFIS 코드); 양륙 시의 제품형태(통 생선인지, 내장이 제거된 것인지 등); 양륙 및/또는 운송 시의 양 및/무게
어획 및 양륙 장소와 시기에 관한 정보
어획 및 양식 지역; 양식시설 위치; 첫 양륙 또는 양식 생산 날짜; 해당 수산물 수탁자(가공업자, 판매업자, 선박 등)
국제수산물무역허가 번호
수입자에 지정된 NOAA 해양어업청의 국제수산물무역허가(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Permit: IFTP) 번호

자료 : NOAA Fisheries, 『U.S.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Fact Sheet』, 2016. 12. 08.의 내용을 참고로 저자 정리

commerce any fish taken, possessed, transported, or sold in violation of any foreign law or regulation or any treaty or in contravention of any binding conservation measure adopted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of organization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⁷⁷⁾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 12. 09., p.88976, Comment 1

현재까지 지정된 대상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전복류(Abalone), 대구류(Cod), 게류(Crab), 능성어류(Grouper), 돔류(Snapper), 해삼류(Sea cucumber), 새우류(Shrimp), 황새치(Swordfish)를 포함한 참치류(Tuna)이며, 대상 수산물의 정확한 HS 코드는 <표 3-5>와 같다.⁷⁸⁾

이에 따라 수입자가 다음 HS 코드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표 3-5> 미국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대상 수산물의 미국 HS 코드 및 제품 설명

HS 코드	제품 설명
0301940100	TUNA BLUEFIN ATLANTIC, PACIFIC LIVE.
0301950000	TUNA BLUEFIN SOUTHERN LIVE.
0302310000	TUNA ALBACORE FRESH.
0302320000	TUNA YELLOWFIN FRESH.
0302330000	TUNA SKIPJACK FRESH.
0302340000	TUNA BIGEYE FRESH.
0302350100	TUNA BLUEFIN ATLANTIC, PACIFIC FRESH.
0302360000	TUNA BLUEFIN SOUTHERN FRESH.
0302470010	SWORDFISH STEAKS FRESH.
0302470090	SWORDFISH FRESH.
0302510010	GROUND FISH COD ATLANTIC FRESH.
0302510090	GROUND FISH COD NSPF FRESH.
0302810010	SHARK DOGFISH FRESH.
0302810090	SHARK NSPF FRESH.
0302895058	SNAPPER (LUTJANIDAE SPP.) FRESH.
0302895061	GROUPE FRESH.
0302895072	DOLPHIN FISH FRESH.
0303410000	TUNA ALBACORE FROZEN.
0303420020	TUNA YELLOWFIN WHOLE FROZEN.
0303420040	TUNA YELLOWFIN EVISCERATED HEAD-ON FROZEN.

⁷⁸⁾ 단, 고차가공품은 제외되는데, 고차가공품이란 대상 수산물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가공된 것으로 참치 통조림 등에는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가 적용됨

0303420060	TUNA YELLOWFIN EVISCERATED HEAD-OFF FROZEN.
0303430000	TUNA SKIPJACK FROZEN.
0303440000	TUNA BIGEYE FROZEN.
0303450110	TUNA BLUEFIN ATLANTIC FROZEN.
0303450150	TUNA BLUEFIN PACIFIC FROZEN.
0303460000	TUNA BLUEFIN SOUTHERN FROZEN.
0303490200	TUNA NSPF FROZEN.
0303570010	SWORDFISH STEAKS FROZEN.
0303570090	SWORDFISH FROZEN.
0303630010	GROUND FISH COD ATLANTIC FROZEN.
0303630090	GROUND FISH COD NSPF FROZEN.
0303810010	SHARK DOGFISH FROZEN.
0303810090	SHARK NSPF FROZEN.
0303890067	SNAPPER (LUTJANIDAE SPP.) FROZEN.
0303890070	GROUPE FROZEN.
0304440010	GROUND FISH COD ATLANTIC FILLET FRESH.
0304440015	GROUND FISH COD NSPF FILLET FRESH.
0304450000	SWORDFISH FILLET FRESH.
0304530010	GROUND FISH COD ATLANTIC MEAT FRESH.
0304530015	GROUND FISH COD NSPF MEAT FRESH.
0304540000	SWORDFISH MEAT FRESH.
0304711000	GROUND FISH COD NSPF FILLET BLOCKS FROZEN '4.5KG.
0304715000	GROUND FISH COD NSPF FILLET FROZEN.
0304870000	TUNA NSPF FILLET FROZEN.
0304895055	DOLPHINFISH FILLET FROZEN.
0304911000	SWORDFISH MEAT FROZEN '6.8KG.
0304919000	SWORDFISH MEAT FROZEN NOT '6.8KG.
0304951010	GROUND FISH COD NSPF MINCED FROZEN '6.8KG.
0304991190	TUNA NSPF MEAT FROZEN '6.8KG.
0305320010	GROUND FISH COD NSPF FILLET DRIED/SALTED/BRINE.
0305494020	GROUND FISH COD, CUSK, HADDOCK, HAKE, POLLOCK SMOKED.
0305510000	GROUND FISH COD NSPF DRIED.
0305620010	GROUND FISH COD NSPF SALTED MOISTURE CONTENT '50%.
0305620025	GROUND FISH COD NSPF SALTED MOISTURE CONTENT BET 45-50%.
0305620030	GROUND FISH COD NSPF SALTED MOISTURE CONTENT BET 43-45%.
0305620045	GROUND FISH COD NSPF SALTED MOISTURE CONTENT NOT '43%.

0305620050	GROUND FISH COD NSPF FILLET SALTED MOISTURE '50%.
0305620060	GROUND FISH COD NSPF FILLET SALTED MOISTURE CONTENT 45-50%.
0305620070	GROUND FISH COD NSPF FILLET SALTED MOISTURE CONTENT 43-45%.
0305620080	GROUND FISH COD NSPF FILLET SALTED MOISTURE NOT '43%.
0305710000	SHARK FINS.
0306142000	CRABMEAT NSPF FROZEN.
0306144010	CRAB KING FROZEN.
0306144090	CRAB NSPF FROZEN.
0308110000	SEA CUCUMBERS LIVE/FRESH.
0308190000	SEA CUCUMBERS FROZEN/DRIED/SALTED/BRINE.
1604141010	TUNA NSPF IN ATC (FOIL OR FLEXIBLE) IN OIL.
1604141091	TUNA ALBACORE IN ATC (OTHER) IN OIL.
1604141099	TUNA NSPF IN ATC (OTHER) IN OIL.
1604142252	TUNA ALBACORE IN ATC (FOIL OR FLEXIBLE) NOT IN OIL IN QUOTA.
1604142259	TUNA ALBACORE IN ATC (OTHER) NOT IN OIL IN QUOTA.
1604142291	TUNA NSPF IN ATC (FOIL OR FLEXIBLE) NOT IN OIL IN QUOTA.
1604142299	TUNA NSPF IN ATC (OTHER) NOT IN OIL IN QUOTA.
1604143051	TUNA ALBACORE IN ATC (FOIL/FLEXIBLE) NOT IN OIL OVER QUOTA.
1604143059	TUNA ALBACORE IN ATC (OTHER) NOT IN OIL OVER QUOTA.
1604143091	TUNA NSPF IN ATC (FOIL OR FLEXIBLE) NOT IN OIL OVER QUOTA.
1604143099	TUNA NSPF IN ATC (OTHER) NOT IN OIL OVER QUOTA.
1604144000	TUNA NSPF NOT IN ATC NOT IN OIL '6.8KG.
1604145000	TUNA NSPF NOT IN ATC NOT IN OIL NOT '6.8KG.
1605100510	CRAB PRODUCTS PREPARED DINNERS IN ATC.
1605100590	CRAB PRODUCTS PREPARED DINNERS NOT IN ATC.
1605102010	CRABMEAT KING IN ATC.
1605102051	CRABMEAT SWIMMING (CALLINECTES) IN ATC.
1605104002	CRABMEAT KING FROZEN.
1605104025	CRABMEAT SWIMMING (CALLINECTES) FROZEN.

주 : 음영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2007~2016) 미국에 수출한 품목임

자료 :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 12. 09., pp.88989-88991, Global Trade Atlas, <http://www.gtis.com/gta> (검색일: 2017.2.15.)

새우와 전복류도 대상 수산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미국산 양식 새우와 전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State)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NOAA는 연방

규정인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를 새우와 전복류에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규정의 적용에 있어 미국산과 수입산 사이에 큰 공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새우와 전복류에 대해서는 이후 관련 기관들이 조율을 통해 규정을 통일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규정의 시행이 기한 없이 연기되었다.⁷⁹⁾

〈표 3-6〉 미국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향후 별도의 시행일이 지정될 대상 수산물(새우 및 전복류)의 미국 HS 코드 및 제품 설명

HS 코드	제품 설명
306160003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15.
306160006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15/20.
306160009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21/25.
306160012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26/30.
306160015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31/40.
306160018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41/50.
306160021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51/60.
306160024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61/70.
306160027	SHRIMP COLD-WATER SHELL-ON FROZEN '70.
306160040	SHRIMP COLD-WATER PEELED FROZEN.
306170003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15.
306170006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15/20.
306170009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21/25.
306170012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26/30.
306170015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31/40.
306170018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41/50.
306170021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51/60.
306170024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61/70.
306170027	SHRIMP WARM-WATER SHELL-ON FROZEN '70.
306170040	SHRIMP WARM-WATER PEELED FROZEN.
306260020	SHRIMP COLD-WATER SHELL-ON FRESH/DRIED/SALTED/BRINE.
306260040	SHRIMP COLD-WATER PEELED FRESH/DRIED/SALTED/BRINE.
306270020	SHRIMP WARM-WATER SHELL-ON FRESH/DRIED/SALTED/BRINE.
306270040	SHRIMP WARM-WATER PEELED FRESH/DRIED/SALTED/BRINE.
1605211000	SHRIMPS AND PRAWNS, NOT IN AIRTIGHT CONTAINERS.

⁷⁹⁾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 12. 09., p.88977, Comment 7

1605291000	SHRIMPS AND PRAWNS, OTHER.
1605570500	ABALONE PRODUCTS PREPARED DINNERS.
1605576000	ABALONE PREPARED/PRESERVED.

주 : 음영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2007~2016) 미국에 수출한 품목임

자료 :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 12. 09., p.88991; Global Trade Atlas, <http://www.gtis.com/gta> (검색일: 2017.2.15.)

3) 시사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무역 데이터시스템(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ITDS)을 통해 수산물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어획, 양륙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수입자들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라는 전자 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ITDS에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큰 변화는 수입자들이 ACE에 제출해야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는 결국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對美 수출업체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미국에 수출한 수산물 중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다랑어, 새치, 게, 새우, 해삼, 대구, 전복으로 이 품목들의 3년 평균 수산물 수출액은 對美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7%를 차지한다.⁸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랑어와 새치류인데, 다랑어와 새치류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조업감시시스템(Fisheries Monitoring System: MFS)이나 어획증명서 등을 통해 상당량의 정보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 적하목록, 선하증권, 운송장 등 다양한 거래 서류를 활용하는 등 제도가 요구하는 정보 각 항목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⁸⁰⁾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2.15.)

3. 식품안전기준 미달에 따른 수산물 억류 조치

1) 미국 식품의약국 수입경보 조치 연구 배경

(1) 미국 식품의약국 수입경보 조치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농무부에서 관할하는 육류, 가금류, 난제품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데, 수산물⁸¹⁾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미국 식품의약국의 주요 업무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관할 내 모든 식품이 미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식품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10년간 식품의약국 관할 제품의 수입량이 매년 5~10%씩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⁸²⁾

FDCA Sec. 801(a)는 표본(sample) 검사에서 “①해당 물품이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 가공, 포장되었거나, 생산, 가공, 보관, 설비에 사용된 시설 또는 장치가 [시설물의 우수제조관리기준에 대한] Sec. 520(f)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해당 물품이 생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또는 ③해당 물품에 불순물이 있거나, 부정 표시된 경우 또는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에 관한] Sec. 505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⁸³⁾ “식품의약국은 이에 근거하여 1974년 처음 수입 제품

81) 수산물은 식품의약국의 관장 사항이나 메기목(Siluriformes)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 생산자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수입자에 대하여는 2016년 4월 15일부터 미국 농무부로 이전되어, 현재 식품의약국은 메기목을 제외한 수산물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82) 미국 식품의약국, <https://www.fda.gov/ForIndustry/ImportProgram/ucm2005484.htm>(검색일 : 2017.4.5.)

83) 김연수, ‘미국 FDA의 수입 경보에 대응해야’,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vol.4.』, 2017.4. p.89.(원자료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A) §801(a) – If it appears from the examination of such samples or otherwise that (1) such article has been manufactured, processed, or packed under insanitary conditions... or the facilities or controls used for the manufacture, packing, storage, or installation of the device do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20(f), or (2) such article is forbidden or restricted in sale in the country in which it was produced or from which it was exported, or (3) such article is adulterated, misbranded, or in violation of Section 505... then such article shall be refused admission.)

에 대한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DWPE)를 시행한 이래, 수입제품이 FDCA §801(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수입경보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⁸⁴⁾

“수입경보에는 시각적 검사 등의 조치 없이 바로 억류하는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이하 ‘DWPE 조치’)와 DWPE 조치와 더불어 추가적인 감시를 하는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 및 감시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with Surveillance, 이하 ‘DWPE 감시조치’)가 있다. 이 중 수입경보에 따라 DWPE 감시조치를 포함하여 DWPE 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체, 품목 및/또는 국가를 적색목록(Red List)이라 하고, 각 DWPE 조치별 적용예외 요건을 충족해 DWPE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업체, 품목 및/또는 국가를 녹색목록(Green List)라 한다. DWPE 조치에 이르지 않으나 강화된 감시조치를 받는 업체, 품목 및/또는 국가 또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에 불구하고 위반의 행태가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황색목록(Yellow List)이라 한다.”⁸⁵⁾

식품의약국은 과거 위법제품의 수입한 전력이 있거나 또는 제품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향후 수입예정인 제품이 위법하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DWPE 조치를 취한다.⁸⁶⁾

(2) 국내 수산물 관련 수입경보 조치 연구 배경

“2017년 4월 6일 기준으로 전 세계 160개국에 대하여 총 1,945개의 수입경보가 발동되었다. 이 중 중국 85종, 멕시코 71종, 캐나다 68종, 인도 57종의 수입 경보가 각각 발동되었으며, 한국은 일본(42건) 다음으로 많은 40종의 수입경보가 발동되었다. 한국에 가해진 40종의 경보 중 수산물과 관련된 조치는 11종으로 2017년 4월 6일 기준으로 국내 156개 수산업체의 231품목에 DWPE

84) 김연수, ‘미국 FDA의 수입 경보에 대응해야’,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vol.4.』, 2017.4. p.89.(원자료 : 미국 식품의약국,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2017. 01., 제9장 제8절 제2목)

85) 김연수, ‘미국 FDA의 수입 경보에 대응해야’,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vol.4.』, 2017.4., p.90.(원자료 : 미국 식품의약국, “Import Alert”, <https://www.fda.gov/ForIndustry/ImportProgram/ActionsEnforcement/ImportAlerts/default.htm>(검색일 : 2017.4.6.))

86) 미국 식품의약국,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2017. 01., 제9장 제8절 제2목

조치가 내려졌다.”⁸⁷⁾ 이 중 아황산염과 관련된 3업체의 3개 품목에 대하여는 DWPE 감시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이다.

〈표 3-7〉 미국의 우리나라 수산물 관련 수입경보 현황

수입경보 번호	최근 공고일	수입경보 명칭	업체수	품목수
16-119	2017.03.31.	수입자 및 해외가공(제조)업체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공동 DWPE 조치	6	18
16-120	2017.02.23.	수산물 HA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가공(제조)업체의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DWPE 조치	11	26
16-39	2017.03.0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를 이유로 한 수산가공식품 및 연육(Surimi)에 대한 DWPE 조치	36	45
16-74	2017.03.23.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발효 또는 염수된 (즉, 21 CFR 108/113/114에 따른 LACF와 산성식품을 제외한) 내장이 제거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거된 어류에 대한 DWPE 조치	42	70
16-81	2017.03.29.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수산식품에 대한 DWPE 조치	28	45
99-19	2017.03.30.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품에 대한 DWPE 조치	1	1
99-21	2017.04.01.	아황산염(Sulfites)으로 인한 식품에 대한 DWPE 감시조치	3	3
99-36	2017.01.12.	상업적 가공업체의 공정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저산성통조림식품 및 산성식품에 대한 DWPE 조치	5	22
99-37	2017.02.25.	공정 계획 미제출로 인한 저산성통조림식품 및 산성식품에 대한 DWPE 조치	1	1
99-38	2017.04.01.	부적절한 공정 관리로 인한 저산성통조림식품 및 산성식품에 대한 DWPE 조치	6	7
99-39	2017.04.01.	부정 표시로 인한 수입식품에 대한 DWPE 조치	1	4

자료 : 김연수, ‘미국 FDA의 수입 경보에 대응해야’,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vol.4.』, 2017.4. p.90., 표1.

(원자료 : 미국 식품의약국 Import Alerts

원자료(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default.html, 검색일: 2017.4.6.))

87) 김연수, ‘미국 FDA의 수입 경보에 대응해야’,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vol.4.』, 2017.4. p.89.

우리나라 업체와 관련하여 발동되어 있는 “수입경보 11가지 중 5가지는 수산물 고유의 수입경보이고, 나머지는 일반식품에 관한 경보(2가지), 저산성통조림에 관한 경보(3가지) 및 식품표시 위반에 따른 경보(1가지) 등이다. 수산물 고유의 수입경보 사유는 수산물 HACCP 규정 미준수, 어류의 내장 미제거, 수입자와 해외가공(제조)업체에 대한 공동 조치, 수산식품 내 살모넬라 증식 및 리스테리아 증식”⁸⁸⁾을 그 이유로 한다.

2)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발효 또는 염수된(즉, 21 CFR 108/113/114에 따른 LACF와 산성식품을 제외한) 내장이 제거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거된 어류에 대한 DWPE 조치⁸⁹⁾

(1) 어류의 내장 미제거로 인한 DWPE 조치 배경 및 대상 어종

1981부터 1987년 사이 미국에서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염장 어류와 관련된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는 내장이 제거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거된 어류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식품의약품은 주로 제품코드 16A-H-(자연/인공 건조된 어류), 16A-P-(보존 처리된 어류), 16I----(온훈된 어류), 16S----(냉훈된 어류)⁹⁰⁾에 대하여 DWPE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발효, 염수된(즉, 21 CFR 118/113 또는 114dp 따른 저산성통조림 및 산

⁸⁸⁾ 김연수, ‘미국 FDA의 수입 경보에 대응해야’,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vol.4.』, 2017.4. p.89.

⁸⁹⁾ 미국 식품의약품, Import Alerts by Number(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alist.html), 수입 경보 16-74의 내용을 저자 요약 정리

⁹⁰⁾ 식품의약품 Product Code (16A-H-), (16A-P-), (16I----) 및 (16S----)로 식품의약품은 블로터(Bloater), 자건 앤초비(Boiled and dried anchovies), 건 앤초비(Dried anchovies), 보존 처리된 어류(Cured fish), 보존 및 염 처리된 어류(Cured salted fish), 머리가 제거된 어류(Dried headless fish), 염 처리된 건 어류(Dry salted fish), 건조된 통 어류(Dried whole fish), 반건조 어류(Half-dried fish), 작은 청어(Herring sprats), 포도주 소스에 담근 청어(Matjes herring), , 일반 보존 처리된 어류(Ordinary cure fish), 부분 건조된 어류(Partially dried fish), 절임 어류(Pickled whole fish), 구들 소형 어류(Roasted small fish), 염 처리된 콜비나(Salted corvina), 염수된 어류(Salted, in brine/Whole fish), 염 처리된 훈제 어류(Salted smoked fish), 산란 전 기름이 오른 청어(Milker herring 및 Schmaltz herring), 조미료를 넣은 훈제 어류(Seasoned smoked fish), 반건조 어류(Semi dried fish), 염 처리된 반건조 어류(Semi dry Salted fish), 소형 어류(Small fish), 간이 조금 된 소형 어류(Small light salted fish), 훈건 어류(Smoked dried fish), 훈제 어류(Smoke fish), 간청어(Soused herring)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성제품을 제외한) 어류로 내장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거된 통 생선, 내장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거된 머리를 제거한 생선 그리고 체강에 생식선이 남아있는 생선이다. 이 때 유산소/무산소 포장된 냉장, 냉동, 실온상태의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이 때 머리와 꼬리를 포함하여 생선의 크기가 5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생선의 크기가 5인치 미만인 경우에는 내장을 제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DWPE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 입증에 따른 DWPE 적용 예외 품목을 녹색목록이라 하는데, 녹색목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⁹¹⁾

(2) 녹색목록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2017년 4월 기준으로 현재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어류와 관련된 수입 경보는 국내 42개 업체 70개 품목에 발동되어 있는데, 이 중 한개 업체의 하나의 품목만이 녹색목록으로 분류되어 있다.

녹색목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어류의 수상염분농도(water-phase salt level)가 20% 이상이거나, 수분활성도 0.85 미만 또는 pH 4.6 이하이어야 하며, 이 때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식품의약품에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작업흐름도, 위험분석 및/또는 공정흐름과 공정과정(즉,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염 처리, 건조, 훈제, 산화, 절임, 발효 또는 염수 과정에 대해서는 한계기준(Critical limit)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준 산정의 기초가 된 정보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둘째, 기형성 된 독소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발효, 염수 등의 공정 이전 기형성 된 독소를 관리하기 위해 삶는 경우(100℃에서 10분 이상)에는 동일 시설에서 그러한 공정 직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은 기형성 된 독소

91) 2017년 4월 5일 기준으로 42개 한국 업체 중 한 업체만이 하나의 품목(마른 멸치)에 대해 경보조치 적용 예외를 받고 있음

관리부터 보툴리눔 형성 억제를 위한 최종 수상염분농도, 수분활성도, pH 관리 까지 동일한 시설에서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해당 제품과 관련된 모든 식품안전 위험관리에 대한 HACCP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수산물 HACCP 규정은 수산물이 가공되는 각 장소별로 HACCP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산물의 가공이 복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예를 들어, 추가 건조 또는 재포장 등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위험 분석에 따라 그 공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공정 장소 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각 공정 장소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넷째, 이상의 수산물 안전 관리와 관련된 계획의 구현을 설명하기 위해 어획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는 감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복수의 장소에 관한 감시 기록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각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실험 결과 즉, 수상염분농도, 수분활성도, pH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은 어류의 내장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식품의약품은 철저한 온도관리로도 보툴리눔 독성물질의 형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은 염장, 건조, 절임 또는 발효되는 어류의 경우 가공 전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때 제거되어야 하는 내장은 장기뿐 아니라 생식샘을 포함한다.

(3) 국내 녹색목록 등록 현황 및 시사점

현재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어류와 관련된 식품의약품의 수입 경보는 42개 업체, 70개 품목에 발동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개 업체의 하나의 품목만이 녹색 목록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 조치가 중국에 12개 업체 24개 품목, 일본에 19개 업체 41개 품목, 캐나다에 4개 업체 11개 품목에 내려져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 경보율은 높은 편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내 업체가 HACCP 규정과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WPE 조치가 발동된 70여 품목 중 52개는 말리거나 볶은 멸치, 6개는 삶거나 훈제한 멸치, 나머지는 조기, 뱀어 등의 생선이었다. 즉, 어류의 내장 미제거

로 인한 DWPE 조치를 받게 된 수산제품의 74.3%가 말리거나 붉은 멸치 제품이었는데, 녹색목록 신청 요건과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은 어류제품의 수상염분농도(water-phase salt level)가 20% 이상이거나, 수분활성도 0.85 미만 또는 pH 4.6 이하인 경우 DWPE 조치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보툴리눔으로 인한 식품 안전 위험성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시판 마른 멸치의 수분활성도는 0.85보다 낮은 0.587~0.809 범위에 머무른다.⁹²⁾ 멸치 제품의 수분활성도는 멸치의 크기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업체별/품목별로 다른 수분활성도를 띄므로 마른 멸치 수분활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업체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멸치를 선별하여 건조율을 높이는 등 제품 수분활성도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이 DWPE 예외 신청 시 수상염분농도, 수분활성도, pH에 관한 자료 이외에 HACCP 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작업흐름도, 기형성 된 독소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이 녹색목록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는 현실적으로 HACCP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국내에는 미국의 HACCP 규정을 준수하는 수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어류의 내장 미제거로 인한 DWPE 조치가 발동되어 적색 목록에 올라가면 해당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예외가 허용되는 녹색 목록으로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HACCP 규정 준수의 필요성이 배가되며, 특히 식품의약품이 어류의 내장 미제거로 인한 DWPE 조치 시 HACCP 규정에 관한 DWPE 조치를 함께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92) 강상인·이수광·김용중·김민주·박선영·허민수·김진수, 「시판 마른청어(*Clupea pallasii*) 및 마른멸치(*Engraulis japonicus*)의 위생 특성 비교 및 품질기준 제시」, 『한국수산물과학회지』, 48(5), 2015., pp.604~613.

3) 수산물 HA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가공(제조)업체의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DWPE 조치⁹³⁾

(1) 수산물 HACCP 규정 위반에 따른 DWPE 조치 배경

1997년 12월 18일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관한 연방 시행규칙(21 CFR 123)의 발효로 미국 내 주(州)간 거래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위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원칙과 위생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었다. 이 규정은 수입 수산식품에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미국 내 수입자들은 자신이 수입하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이 위 시행규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verification)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식품의약국은 수산물 HA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가공(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DWPE 조치(이하, 수산물 HACCP 규정 위반에 따른 DWPE 조치)를 수입경보 16-120으로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국 지역 사무소는 수입경보 16-120의 적색목록에 기재된 해외 가공(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해서는 표본검사(sampling) 등을 통한 물리적 검사 없이 바로 역류할 수 있다. 이 때 식품의약국의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 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는 해외 가공(제조)업체가 특정 제품에 대해 HACCP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품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DWPE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외 가공(제조)업체에 대해 DWPE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입 경보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국내 DWPE 조치 및 시사점

수산물 HACCP 규정 위반에 따른 DWPE 조치는 현재 국내 11개 업체, 26개 품목에 취해졌다.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물량을 고려했을 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중국은 1개 업체 3개 품목, 일본은 5개 업체 11개 품목에만 동 조치가 내

⁹³⁾ 미국 식품의약국, Import Alerts by Number(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alist.html), 수입 경보 16-120의 내용을 저자 요약 정리

려졌음을 고려할 때 국내 수산업계가 상대적으로 HACCP 요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HACCP에 따라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하는 수산물·수산식품이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및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을 포함한 수산물과 관련된 연방 시행규칙(21 CFR 123)을 준수하여 제조되었음을 보장할 검증 의무를 갖고 있다. 수입자가 이러한 검증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식품의약국과 양해각서 또는 비슷한 합의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이다.⁹⁴⁾ 즉, 양해각서 또는 합의를 통해 식품의약국이 해당 국가가 수출 수산물과 관련하여 미국의 식품안전규정에 준하는 규정 체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대국이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자국 수입자가 복잡한 검증절차 없이 해당 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수입자가 스스로 자신이 수입하는 수산물·수산식품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절차(Verification procedure)를 서면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절차는 해당 제품이 건강에 해롭거나 불결한 조건에서 가공되어 FDCA Sec. 402에 따라 오염된(Adulterated)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제품 설명(Product specification) 및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step)를 포함해야 한다.⁹⁵⁾

수입업체가 검증절차와 관련해 취해야 하는 적극적 조치란 ①해외 가공업자로부터 수입하려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의 로트(lot)별로 21 CFR 123에 정한 HACCP과 위생 감시 기록을 받을 것, ②해외 정부 감독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제3자로부터 수입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21 CFR 123에 따라 가공되었음에 관해 계속적인(continuing) 또는 로트별(lot-by-lot) 확인증을 받을 것, ③수입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21 CFR 123을 준수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가공

9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123, §123.12(Special requirements for imported products), §123.12(a)(1)

95)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123, §123.12(Special requirements for imported products), §123.12(a)(2)

업자의 시설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 ④해외 가공업자의 영어로 된 HACCP 계획 사본 및 수입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21 CFR 123을 준수했음에 대한 해외 가공업자의 서면으로 된 약속서를 보관할 것, ⑤주기적으로 수입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검사하고, 해외 가공업자로부터 수입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21 CFR 123을 준수했음에 대한 서면으로 된 영문 약속서를 받아 보관할 것, 또는 ⑥21 CFR 123를 준수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기타 검증 조치를 취할 것 중 하나를 말한다.⁹⁶⁾

문제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의 관계부처와 양해각서를 맺는 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입자의 검증 의무와 그에 따른 적극적 조치 의무는 모두 수출자의 미국 HACCP 규정 준수 또는 그와 동등한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내 수산업체가 미국의 HACCP 규정을 독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캐나다의 관계부처는 자국 및 미국의 요건을 준수하여 수산물·수산식품을 가공하는 업체 명단을 공지하고 있는데, 식품의약국은 이러한 명단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전제로, 수입자가 해당 업체들로부터 수산물·수산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위에 설명한 수입업체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 중 “②해외 정부 감독 기관으로부터 수입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21 CFR 123에 따라 가공되었음에 관한 계속적인(continuing) 확인증을 받을 것”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수입업체는 위 수출업체들로부터 수입한 기록을 갖고 있으면 위에 설명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2017년 4월 17일 기준으로 중국은 1063개, 일본은 72개, 캐나다는 723개의 업체명단을 공개했다.⁹⁷⁾ 각국은 지방 행정 구역별 식품 위생 감시관을 통해 자국의 식품위생 안전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함으로써 미국

⁹⁶⁾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123, §123.12(Special requirements for imported products), §123.12(a)(2)(ii)

⁹⁷⁾ 미국 식품의약국, “Fish and Fishery Product Imports: Affirmative Steps”,
<http://www.inspection.gc.ca/food/fish-and-seafood/exports/by-jurisdiction/usa/establishments-approved-for-export/eng/1304428645296/1304428789402>(검색일 : 2017.4.17.)

수입업체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자국의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산물 HACCP 규정 위반에 따른 DWPE 조치는 국내 수산업계가 HA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다. 미국 HACCP 규정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 캐나다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수입자 및 해외가공(제조)업체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공동 DWPE 조치⁹⁸⁾

(1) 수입자 및 해외가공(제조)업체에 대한 공동 DWPE 조치 배경

수입 수산식품에 관한 연방 시행규칙(21 CFR 123.12)을 따르지 않은 수산물 수입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때 까지 DWPE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여기서 수입자란 세관 절차에서 말하는 수입자와는 다르다. 세관 절차에서는 세관수속대변인, 화물 운송업자, 운송인 등을 지칭하나 DWPE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세관 도착 당시의 미국 소유주나 수탁인, 또는 해외 소유주의 미국 내 대리인을 지칭한다.

수입정보 16-119는 수입자가 특정 제품 및 그 해외제조자에 대한 HACCP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수입자, 제품, 해외가공(제조)업체 모두에 대해 취해지는 DWPE 조치를 말한다. 이는 수입정보 16-120(수산물 HACCP 규정 위반에 따른 DWPE 조치)에서 해당 제품의 가공(제조)업자를 적색 목록에 올리는 것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는 있다. 식품의약품은 수입정보 16-119를 통해 HACCP 검증 요건을 위반한 수입자 및 해당 수입자가 수입한 특정 제품과 그 해외가공(제조)업체에 대해 DWPE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당 수입자와 관련된 모든 해외가공(제조)업체에 대해 DWPE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입자가 수입정보 16-119로 DWPE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해외가공(제조)업체의 제품 역시 억류된다. 다만 DWPE 조치를 받고 있는 수입자로 인해 DWPE 조치를 받게 된 해외가공(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다른 수입자의

⁹⁸⁾ 미국 식품의약품, Import Alerts by Number(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alist.html), 수입 정보 16-119의 내용을 저자 요약 정리

경우 그에 별도의 DWPE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상 DWPE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수입자가 수입 수산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HACCP 확인 절차도 취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과 그 수입자와 관련된 모든 가공(제조)업체도 DWPE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

(2) 국내 DWPE 조치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정보 16-119를 통한 DWPE 조치는 6개 업체 18개 품목에 내려져있다. 이 중 4개 업체의 4개 품목은 수입상 A, 1개 업체의 13개 품목은 수입상 B, 나머지 1개 업체의 1개 품목은 수입상 C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 거부되었다.

수입정보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21 CFR 123.12(d)에 따라 해당 수산물·수산물식품이 HACCP 규정(21 CFR 123)을 준수하여 가공되었고, 수입자가 이를 적절히 확인했음을 보여야 한다. 즉, 국내 수입자가 HACCP 규정을 준수하고, 수입자가 이에 관해 검증했음을 식품의약국에 입증하면 수입자, 수출자, 제품이 모두 함께 DWPE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HACCP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다룬 수산물 HACCP 규정 위반에 따른 DWPE 조치의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절 미국 수산물 비관세장벽의 특징

무역장벽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무역규범에서도 국가안보,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각국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⁹⁹⁾

미국 수산물 비관세장벽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의 목적이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이다. 식품의약국은 관할 내 모든 식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

99)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22~23.

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의 관련 법규의 상당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이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식품의 규격 및 기술요건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은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원산지표시를 포함한 까다로운 식품 표시요건, 통관검역절차, 시설물 등록 절차 등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규격 및 기술요건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수산자원의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4장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실태 분석 《

제1절 중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주요 제도

중국의 식품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제도는 기관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수산물의 수입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관할하는 식품안전법을 상위법으로 그 아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관할의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험법, 국경위생검역법 등을 두고 있다.

〈표 4-1〉 중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제도

기관	법률	행정부규	행정 규정 및 규범성 문건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NHFPC)			식품위생허가관리방법 식품안전 국가표준
국가식품약품감독관 리총국(CFDA)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식용농산물시장판매품질안전감독관리 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 역총국 (ASAIQ)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험법 국경위생검역법	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조례	입국동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수입수생동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식품표시관리규정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수출입식품라벨관리방법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법		

자료 : 해양수산부, 『對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2016.8, p.25,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중국 식품안전법령집』, 2016, p.3, 재정리

1. 식품안전법¹⁰⁰⁾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대중의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식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 개정되었다.¹⁰¹⁾ 개정된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규범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2009년 총 10장 104조에서 2015년 총 10장 154조로 확대되었다. 기존 식품안전법(2009)과 비교하여 목차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법률 조항이 보다 더 구체화, 세분화되었다. 특히 기존에 30개(27~56조)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식품생산경영 장을 4개의 절로 구분된 51개(33~83조)로 세분화하였다.

〈표 4-2〉 중국 식품안전법 주요 개정 방향

개정 전	개정 후
제1장 총칙(1~10조)	제1장 총칙(1~13조)
제2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11~17조)	제2장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14~23조)
제3장 식품안전표준(18~26조)	제3장 식품안전표준(24~32조)
제4장 식품경영(27~56조)	제4장 식품생산경영(33~83조) 제1절 일반규정(33~43조) 제2절 생산경영과정 통제(44~66조) 제3절 상표, 설명서 및 광고(67~73조) 제4절 특수식품(74~83조)
제5장 식품검사(57~61조)	제5장 식품검사(84~90조)
제6장 식품수출입(62~69조)	제6장 식품수출입(91~101조)
제7장 식품안전 사고처리(70~75조)	제7장 식품안전 사고처리(102~108조)
제8장 감독관리(76~83조)	제8장 감독관리(109~121조)
제9장 법률책임(84~98조)	제9장 법률책임(122~149조)
제10장 부칙(99~104조)	제10장 부칙(150~154조)

자료 : 「중국식품안전법(2009)」, 「중국식품안전법(2015)」 참조, 저자 작성

100)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09)」, 「중국식품안전법(2015)」 참조

10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09)」 제1장 제1조,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1장 제1조 참조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식품 감독 기관의 명시, 식품 생산자의 책임 강화, 인터넷 식품 판매자의 실명 등록 의무화, 식품 수출입 관리 감독 강화, 특수식품(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의약품, GMO 식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6가지 측면에서 개선·보완되었다.¹⁰²⁾

이 중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크게 4가지가 있다.

1)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수출업체의 책임 강화¹⁰³⁾

식품안전법(2015)은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 보장과 관련하여 기존에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던 관할 기관을 수출입검험검역부문으로 지정하여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수출입검험검역부문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혹은 지역)의 식품안전 관리 체제 및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검험검역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둘째, 식품안전법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출업체에게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제품 설명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수입 식품뿐 아니라 식품첨가제도 수출입 제품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검역에 통과해야 하며, 수출입검험검역부문의 요구에 따라 합격 증빙서류를 부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상에게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상은 수입 식품이 중국 식품 안전 국가표준을 위반하거나 인체에 위해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102)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 보고」, 2015.6, pp. 1~9 참조, 내용 재정리

10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09)」 제4장 제62~69조,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4장 제91~101조 참조, 내용 재정리

〈표 4-3〉 중국 식품안전법 수출입 식품관련 신설 내용

관련 내용	담당 부문(자)
수입 식품 감독관리 기관	식품 수입 과정: 수출입검험검역부문 식품 유통/판매 과정: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수입되는 식품의 라벨 및 설명서에 대한 책임	해외수출업체
수입 식품과 식품첨가제 검역 합격 요구	수출입검험검역부문
해외수출업체 심사제도 및 제품회수제도	수입상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4장 제91~101조 참조, 저자 작성

2)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¹⁰⁴⁾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식품 표준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준치와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표준 및 감측 평가 “13.5 계획”에 따르면 “12.5 계획” 동안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5,000여개¹⁰⁵⁾의 식품 표준을 정리하였고 2016년을 기준으로 총 1,220개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표하여 현재 1,162개가 시행 중이다.¹⁰⁶⁾ 중국이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주요 내용

구분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정 기관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준수 여부	필수
규정 내용	①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 제품 중의 질병유발성 미생물·잔류농약·잔류동물약품·생물독소·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신체건강을 해치는 물질의 허용 기준에 대한 규정 ② 식품첨가제의 종류·사용범위·용량 ③ 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대상에 제공되는 주요·보조식품의 영양성분요구 ④ 위생, 영양 등 식품안전요구와 관련된 라벨·표시·설명서에 대한 요구 ⑤ 식품생산 및 판매 과정 중의 위생요구 ⑥ 식품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⑦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품검사 방법과 규정 ⑧ 기타 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이 필요한 내용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3장 제24~27조 참조, 저자 작성

104)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7장 제92조

105) 중국 식품표준 및 감측 평가서, 「식품안전표준 및 감측 평가 “13.5 계획”」, 2016.11., p.1.

106)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플랫폼, <http://bz.cfsa.net.cn/db/>(검색일 : 2017.4.23.)

3) 식품안전 전 과정 추적관리제도¹⁰⁷⁾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추적관리제도를 신설하였다. 제42조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의 생산 이력이 추적되도록 해야 하며, 식품약품관리감독부처는 국무원 농업행정부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 과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추적관리제도는 생산 이력정보와 물류·유통 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식품 이력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식품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¹⁰⁸⁾

식품안전법 제2장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과 평가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예방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2009년 도입된 식품안전 위해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식품 샘플링 비용 및 실시 상황 구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 되는 식품뿐 아니라 수출입 식량, 과일, 식용 수생동물, 마카오·홍콩으로 제공되는 육생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등 5가지 유형¹⁰⁹⁾의 식품에 대해 매년 위험 감독 계획을 발표하여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2.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¹¹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년 동물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해외 확산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 수산물

10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4장 제42조 참조, 내용 재정리

10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2장 제14~23조 참조, 내용 재정리

109)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http://www.aqsiq.gov.cn/xxgk_13386/zxxxgk/201512/t20151222_457052.htm(검색일 : 2017.4.23.)

110)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관리방법(총국령 제31호),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총국령 제135호), <http://www.aqsiq.gov.cn>(검색일 : 2017.4.23.) 참조, 내용 재정리

검험검역 관리방법(총국령 제31호)을 제정하였다.¹¹¹⁾ 본 령은 2011년에 개정되어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 ‘총국령 제135호’로 공포되었다.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에 따라 중국 각 지역의 수출입검험검역국이 수입 수산물의 검역을 진행하므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은 총칙, 수입 검험·검역, 수출 검험·검역, 감독관리, 부칙 등 총 5장 5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2장에 규정된 수입 검험·검역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 안전·위생 관련 위험이 높은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동물 및 기타 양식 수산물에 관한 검역심사비준제도를 시행하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역 심사비준수속을 밟아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을 취득해야 한다. 이 허가증이 없는 경우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¹¹²⁾

또한 2011년에 개정된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에 따르면 “해외 생산·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와 대리상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등록 및 관리를 받아야 하며, 수산물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과 판매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¹¹³⁾

검험검역은 수산물의 병원균, 중금속, 잔류 농·동물용약, 역병, 기생충 등에 관해 실시하며 검험검역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수입화물검험검역증명(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을, 검험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산물에 대한 처분 방법을 알리는 검험검역처리통지서(检验检疫处理通知书)를 발급한다.¹¹⁴⁾

111)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관리방법(총국령 제31호) 제1조

112)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총국령 제135호) 제2장 제8~22조 참조

113)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총국령 제135호) 제2장 제12조

114)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총국령 제135호) 제2장 제21조

3.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¹¹⁵⁾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관리 방법(총국령 제44호)은 2003년에 수생동물 전염병 예방, 수산업 생산,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16년 7월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총국령 제183호)을 제정하여 개정된 규정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은 기존 총 6장 27개 조문에서 총 8장 58개 조문으로 확대되어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2장 검역 진입에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 수생동물에 대한 검역 진입제도를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품 위험 분석, 안전 위생 통제 체계 평가 및 심사, 검험검역 요건, 외국 양식 및 포장 업체 등록 등 4가지 제도가 포함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 수생동물의 검험검역 요건을 유형별로 제정·발표하여 이를 토대로 처음 중국으로 수생동물을 수출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제품에 대한 위험 분석 및 안전 위생 통제 체계를 수립하며, 이미 수생동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생동물 안전 및 위생 통제 체계에 대한 회고성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검험검역 요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수생동물의 종류 및 국가 혹은 지역을 지정하여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으로 수생동물을 수출하는 양식 및 포장 업체를 관리한다. 관리 대상 업체는 수출국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업체 정보, 수생동물 정보, 역병 및 유해물질 감독 정보 등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제공해야 하며, 등록 주기는 3년으로 회고성 심사를 통한 등록 연장도 가능하다.

115)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수입 식용 수생동물 지정항구제도 실시에 대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2번째 수입 식용 수생동물 지정항구 명단에 대한 공고, <http://www.aqsiq.gov.cn>(검색일 : 2017.4.23.) 참조, 내용 재정리

〈표 4-5〉 중국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 개정 방향

개정 전	개정 후
제1장 총칙(1~4조)	제1장 총칙(1~5조)
제2장 수입리스크 분석 및 검역심사(5~6조)	제2장 검역 진입(6~13조)
제3장 적재 전 검역위생요구(7~13조)	제3장 해외 검험검역(14~21조)
제4장 포장 및 운송재료요구(14~17조)	제4장 수입 검험검역(22~35조)
제5장 수입 검험검역(18~22조)	제5장 통과 및 환적 검험검역(36~38조)
제6장 부칙(23~27조)	제6장 감독관리(39~47조)
	제7장 법률책임(48~53조)
	제8장 부칙(54~58조)

자료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관리방법(2003),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2016),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120710.htm,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032004/201210/t20121015_235190.htm
 (검색일 : 2017.4.25.) 내용 재정리

제3장 해외 검험검역에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등록된 해외 수출업체와 어획구역이 해당 수출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부합하여 정부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식용 수생동물 생산의 등록업체는 수출국의 역병, 유해물질, 병원균 및 미생물 감독·검사를 거쳐 쌍무 검험검역 협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혹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업체와 양식장 혹은 어획구역의 위생, 수생동물의 포장 및 운송 등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으며, 해외 검험검역을 진행할 경우 수출국의 정부 기관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제시하는 양식대로 검험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에 따라 수생동물에 대한 중국 내 검험검역은 각 지역 수출입검험검역부서의 현장 검역을 거쳐야 하며 식용 수생동물의 검역 항목은 역병, 기생충, 패류 독소 등 생물 독소와 중금속 및 잔류 농약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제23조에 따라 식용 수생동물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지정하는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하는데, 2017년 1월까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58개의 식용 수생동물 수입 항구를 발표하였다.¹¹⁶⁾

116)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번째 수입 식용 수생동물 지정항구 명단에 대한 공고,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701/t20170120_481377.htm(검색일 : 2017.4.23.)

새로 추가된 제5장 통과 및 중계검험검역에 따르면 홍콩 또는 마카오를 경유하여 중국 내륙으로 수출하는 경우 선적인 또는 대리인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지정하는 검역기관에게 환적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제3국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 내륙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3국 또는 지역의 정부 기관을 통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요구하는 환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주요 비관세장벽 분석

1. 식품안전 국가표준¹¹⁷⁾

중국 표준화법과 표준화법 실시 조례에 따르면 공업 및 농업 제품 등에 대한 통일된 기술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에서는 표준을 제작해야 한다. 표준의 종류는 등급에 따라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및 기업표준으로 분류되며, 이 중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표준을 제외한 나머지 표준은 강제표준과 권장표준으로 구분된다. 이 때 권고표준은 “T”를 표시해 구분한다. 예를 들어, GB는 강제 국가표준, GB/T는 권장 국가표준을 의미한다.

식품산업에 있어 국가표준은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위생표준과 안전표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표준은 특정 식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따라서 식품 업체들은 국가표준뿐 아니라 산업표준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표준체계하에서는 표준을 제정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률이 낮았다. 이로 인해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기존에 발표한 식품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강제적 산업표준을 통합하여 식품안전표준으로 발표하였다. 식품안전표준은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11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 3장 제15~19조,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플랫폼관리 참조(<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내용 재정리

식품안전 지역표준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안전 지역표준은 중국 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식품을 중심으로 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물 수출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다.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은 1,220개이며, 이중에서 1,162개가 이행 중이고 나머지 58개는 폐지되었다.¹¹⁸⁾ 현재 시행 중인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검역방법 및 전문규정, 잔류 농·동물용약, 생산경영규범, 영양강화제, 영양 및 특수식품, 식품 통용 등 9개로 구분할 수 있다.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영양강화제, 영양 및 특수식품과 관련된 표준은 해당 식품 또는 첨가제의 정의 및 범위, 관능 지표, 이화학적 지표, 기술 요건, 미생물지표 등에 관해 규정한다. 검역방법 및 전문규정은 식품 및 식품첨가제에 대한 검역방법에 관한 표준으로, 이화학, 독물학, 미생물 3가지 유형의 검사방법을 포함한다. 생산경영규범은 기업이 식품을 생산할 때 이행해야 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공장과 설비 등의 환경 및 위생, 종업원, 생산과정 중의 안전통제, 오염물 처리, 식품의 저장 및 운송 등 전반적인 식품생산과 기업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잔류 농·동물용약의 경우 식품에 함유되는 농약 및 동물용약의 허용 기준 및 측정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식품 통용표준은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오염물과 식품첨가제의 허용 기준, 라벨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8)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플랫폼관리 참조(<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표 4-6〉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분류 및 수산물 관련 표준 예시

분류	주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표준	GB 19643-2016 '조류 및 그 제품', GB 10133-2014 '수산 조미품', GB 2733-2015 '신선, 냉동 동물성 수산물', GB 31602-2015 '건해삼', GB 10136-2015 '동물성 수산제품' 등 64개
식품첨가제표준	GB 29202-2012 'N2', GB 25573-2010 '과산화 칼슘', GB 1886.1-2015 '탄산나트륨', GB 1886.9-2016 '염산' 등 587개
식품 관련 제품표준	GB 4806.1-2016 '식품 접촉자료 및 제품 통용 안전요구', GB 4806.7-2016 '식품 접촉용 비닐재료 및 제품', GB 14930.1-2015 '세탁제', GB 14930.2-2012 '소독제' 등 15개
검역방법 및 전문규정표준	GB 5009.237-2016 '식품pH치의 측정', GB 5009.231-2016 '수산물 중 휘발성 페놀 잔류량의 측정', GB 5009.274-2016 '수산물 중 시가독신의 측정' 등 287개
잔류 농·동물용약표준	GB 23200.88-2016 '수산물 중 다중 유기염소 농약잔류량의 검역방법', GB 29682-2013 '페니실린류 약물잔류의 측정 고효액상사무법' 등 135개
생산경영규범표준	GB 20941-2016 '수산제품 생산위생규범' 등 25개
영양강화제표준	GB 1903.17-2016 '락토페린', GB 1903.13-2016 'L-카르니틴' 등 29개
영양 및 특수식품표준	GB 10765-2010 '영유아 배합식품' 등 9개
식품 통용표준	GB 2762-2017 '식품 중 오염물 허용 기준', GB 28050-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GB 2760-2014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등 11개

주 : 2017년 4월 23일까지 발표한 수산물과 관련된 식품안전 국가표준들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자료 :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플랫폼관리 참조 저자 작성(<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분류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특정 식품과 이와 관련되는 식품첨가제표준, 통용표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 '조류 및 그 제품', '수산 조미품', '신선·냉동 동물성 수산물', '건해삼', '동물성 수산 제품', '식염' 등 6가지 수산 식품표준이 발표되어 있다. 앞서 중국의 한국산 수산물 통관거부 비중이 높았던 김에 적용되는 국가표준('조류 및 그 제품')을 살펴보면 관능 요건, 오염물 허용 기준, 미생물 허용 기준 및 식품첨가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조미김의 오염물과 식품첨가제와 관련된 요건은 통용 표준을 따르되, 미생물에 관한 기준치는 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조미김의 미생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따로 검사검역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중국은 균락총수, 대장균

균과 곰팡이에 대한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미김이 통관거부가 가장 많이 되는 이유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이다.

균락총수는 세균수를 일컫는 표현으로 중국이 2005년에 발표한 ‘조류제품 위생표준’에서 조미김의 균락총수에 대해 명확하게 30,000CFU/g의 요건을 두고 있었다.¹¹⁹⁾ 그런데 조미김의 가공 특성 상 특정한 온도에서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균락총수 수치가 상승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중국의 균락총수 규정이 불합리한 무역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업계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12월 23일 중국 정부는 조미김의 특수 공전을 감안하여 새로운 식품 안전 국가표준 GB 19643-2016 ‘조류 및 그 제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균락총수 기준치는 30,000~100,000CFU/g으로 완화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¹²⁰⁾ 이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검사·검역 항목은 한국의 산가, 과산화물가와 타르색소 3가지만¹²¹⁾ 항목에 비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표 4-7〉 즉석 조류 제품 미생물 허용 기준

구분	샘플 추출 방법* 및 허용 기준				검역 방법
	n	c	m	M	
균락총수/(CFU/g)	5	2	3×10^4	10^5	GB 4789.2
대장균군/(CFU/g)	5	1	20	30	GB 4789.3
곰팡이**/(CFU/g) ≤	3×10^2				GB 4789.15

* : 샘플 추출 방법은 GB 4789.1에 따라 실행

** : 즉석 조류 건제품만 해당

n : 검사 시료수(출처: GB 4789.1-2016의 3.2.2)

c : m값을 초과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시료수(출처: GB 4789.1-2016의 3.2.2)

m : 미생물 허용 기준치(출처: GB 4789.1-2016의 3.2.2)

M : 미생물 최대 허용한계치(출처: GB 4789.1-2016의 3.2.2)

자료 :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GB 19643-2016 ‘식품안전 국가표준 조류 및 그 제품’」, <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참조 저자 작성

119) 중국 위생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GB 19643-2005 ‘조류제품 위생표준’」, <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120)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GB 19643-2016 ‘식품안전 국가표준 조류 및 그 제품’」, <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121) 식품의약품안전처, 「19. 수산가공식품류 ‘19-4 조미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2017.5.25.(검색일 기준) 참조

동시에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젓갈에 대한 기준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젓갈은 실장 중국의 액젓, 굴 소스 등과 같이 GB 10133 ‘수산 조미품’ 기준이 적용된다. 이 때 균락총수는 10,000~100,000CFU/g, 대장균군은 10~100CFU/g의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¹²²⁾

〈표 4-8〉 수산 조미품 미생물 허용 기준

구분	샘플 추출 방법* 및 허용 기준				검역 방법
	n	c	m	M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	2	10 ⁴	10 ⁵	GB 4789.2
대장균군 (CFU/g 혹은 CFU/mL)	5	2	10	10 ²	GB 4789.3 평판계수법

* : 샘플 추출 방법은 GB 4789.1와 GB/T 4789.22에 따라 실행

n : 검사 시료수(출처: GB 4789.1-2016의 3.2.2)

c : m값을 초과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시료수(출처: GB 4789.1-2016의 3.2.2)

m : 미생물 허용 기준치(출처: GB 4789.1-2016의 3.2.2)

M : 미생물 최대 허용한계치(출처: GB 4789.1-2016의 3.2.2)

자료 :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GB 10133-2014 ‘식품안전 국가표준 수산 조미품’

<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참조 저자 작성

문제는 젓갈이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수산물이 주원료의 60% 이상 차지한다는 점이다. 젓갈은 발효 숙성시킨 비가열 식품으로써 원료 자체에 균락이 존재하며, 식염을 가함으로 따로 균락에 대한 기준이 필요없는 식품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미생물 기준과 관련해 대장균만 다루고 있고 균락총수에 대해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¹²³⁾

¹²²⁾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GB 10133-2014 ‘식품안전 국가표준 수산 조미품’

<http://bz.cfsa.net.cn/db> (검색일 : 2017.4.23.)

¹²³⁾ 식품의약품안전처, 「19. 수산가공식품류 ‘19-2 젓갈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2017.5.25.(검색일 기준) 참조

2. 수산물 수입 심사 및 평가 시스템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제와 현황을 평가·심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검사검역요건을 정할 수 있다.¹²⁴⁾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신규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험분석을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수입여부를 결정을 하는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신규 농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가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 위험분석을 진행하며, 이 위험분석을 통과하지 않은 품목은 對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중국으로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 농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 총 5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¹²⁵⁾ 우선 수출국 정부가 수출하고자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해당 품목의 명칭, 용도, 수입상 정보 및 수출상 정보를 담은 서면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전검사검역허가 개시를 요청한다. 중국 정부가 서면 신청서에 동의하면 수출국 정부에게 국가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설문지를 전달한다. 수출국 정부가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중국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위험 분석을 진행하며, 분석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이 거친 후 양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 협상을 실시하여 ‘검사검역 위생의정서’에 서명한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출국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을 개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수산물은 중국의 수출 관련 검사검역자격을 이미 취득했거나 또는 중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고 국가 및 수산물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다. 수산물 중 가열처리한 통조림 등 고차 가공품을 제외한 신선냉장·냉동

¹²⁴⁾ 「중국식품안전법(2015)」 제6장 제101조

¹²⁵⁾ 신규 농수산물 對중국 검험검역 진입 절차, http://www.aqsiq.gov.cn/xxgk_13386/ywxx/dzwjy/201406/t20140626_416136.htm(검색일 : 2017.4.20.)

제품이 해당되며, 세부적인 목록은 생물의 종과 가공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206개 품목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수출하고자하는 품목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이러한 사전 위험분석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¹²⁶⁾

한국은 견해마, 냉장해마, 냉장 갈치, 냉장 참조기와 냉장 병어 5가지 품목에 대해 진행한 바가 있다.¹²⁷⁾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냉장 갈치의 국가 및 해당 품목 생산·교역, 생산·가공업체 명단, 수출국 중앙정부의 법률법규제정 및 해당 품목 수출업체 일괄적용 여부, 주관부서의 구조 정보, 정부 측 통제 및 감독 현황, 검사체계 정보, 제품정보, 등록허가비준 및 증서발급 시스템관리감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요구하였다. 냉장 갈치의 경우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는 냉장 수산물로써 위생에 대해 엄밀한 사전 위험성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순 가공품인 견해마는 위험성이 낮을뿐더러 태국, 세네갈과 기니 3개 국가로부터 수입한 실적도 있다. 특히 태국으로부터 꾸준히 수입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견해마 수입액은 연평균 3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¹²⁸⁾ 이처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 실적도 있고 위험성이 낮은 수산물도 냉장 갈치처럼 복잡한 심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업계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를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전 진입절차는 길게 8년 짧게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전면 철폐로 수산물 진입장벽이 강화되어 부가적인 수출 증가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전 위생검역 실시 합의를 달성하더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국의 검사검역기관의 상시 관리 및 감독 실시에 대한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수출 품목의 산지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검역 관리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26) 해양수산부, 「對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2016.8, p.51.

127) 해양수산부, 「對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2016.8, p.54.

128) Global Trade Atlas 수산물 교역 원자료 참조(<http://www.gtis.com/gta>, 검색일 : 2017.4.20.)

3. 통관 투명성과 일관성의 결여¹²⁹⁾

투명성과 일관성 결여는 중국 통관절차의 중대한 비관세장벽이다. 중국 각 지역의 수출입검험검역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검역소마다 통관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A지역출입국검험검역국과 B지역출입국검험검역국 등은 해당 검역소의 식품안전규칙 방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고 응답했으나, 방침의 세부 내용이 불투명하다. C지역출입국검험검역국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 품목별로 비공개 진입허가정책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은 통관 심사가 까다롭고 통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집중통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수산물의 검역 시간은 각 품목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출입국검험검역국에서는 약 7일정도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내륙으로 배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7일의 통관시간은 수출 업체와 수입업체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3절 중국 수산물 비관세장벽의 특징

중국은 불완전한 법률체계로 인해 멜라민 분유 파동과 같은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식품안전법 및 일련의 규제들을 신설·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정비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식품안전 관련 규제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가 수산물 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식품 수입 규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일례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식품의 성분, 라벨, 검역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되고 있어, 수산물 수출 시 이에 관련된 모든 표준을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즉, 조미김 수출 시

¹²⁹⁾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중국 각 지역 수출입검험검역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함

GB 19643-2016 ‘조류 및 그 제품’과 이 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GB 2762 ‘식품 중 오염물 허용 기준’과 GB 29921 ‘식품 중 병원균 허용 기준’ 등 여러 개의 규정을 동시에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와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출입국검험검역국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규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대로 검역을 진행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수산물 검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이로 인해 통관에 있어 지역별 통관 난이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제1절 요약

WTO, FTA 등 시장 개방의 확산으로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 강화로 자국 산업 등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WTO 규정 상 허용 가능한 수입규제수단을 NTBs로 실행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같은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 결과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넓어져 과거 수입금지, 수량규제 중심에서 최근 기술적 규제, 국가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대부분은 각국 국내 제도·법령 등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제 2, 3위의 상위 수출국인 미국, 중국이 최근 비관세장벽을 크게 강화하면서 국내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이들 국가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기술 조치(TBT, SPS)의 동향을 분석하고, 5년 이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또는 우려되는 기술 조치를 분석,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때 미국과 중국에서 제도와 법령의 형태로 운영되는 무역장벽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수출 식품 중에서도 수산물·수산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내에 시행이 확실히 된 기술 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교역국으로 2016년 수산물 교역액이 26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연평균 4.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국가로, 특히 수입 중심의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¹³⁰⁾ 미국의 수산물 교역은 수입을 중심으로 높은 증

가을을 보이는 가운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美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미국 식품의약국 규정과 해양대기국 규정이 있다. 식품의약국은 미국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모든 식품 안전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해양대기국(NOAA)은 해양자원의 남획, 멸종, 서식지 훼손 등과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용하면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수입 수산물에 적용된다.

대표적인 제도를 보면 미국은 1974년 이래 자국의 식품 위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경보 조치(이하 'DWPE')를 발동하는데, 각각의 수입경보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DWPE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우 어류의 내장 미제거(건멸치 등), 수산물 HACCP 미준수 등으로 DWPE 조치 경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음으로 해양포유류보호법상 수산물 수입 조건에 대한 대비로, 미국은 자국 기준을 초과해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입법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2016년 12월 8일 IUU 어업과 수산물 원산지세탁(Seafood Fraud) 근절을 위한 수산물 수입 감시제도가 도입되었다. IUU 어업 및 원산지세탁에 특히 취약한 수산물·수산식품(대상 수산물)을 설정, 2018년 1월 1일부터 대상 수산물 수입 시 어획~통관 전 과정의 허가·보고·기록물 보관 의무를 강화했다. 향후 모든 수산물로 동 규정 확대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제도의 도입·시행에 대응해 미국 수산물 HACCP 규정 준수 방안 마련, 해양포유류 개체 수, 부수어획량 제한, 국내 어업별 포유류 혼획량 등에 대한 기초연구 및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입법, 국내 조업감시시스템에서 취합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기록물 준비·관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130) <표 2-1> 참조

〈표 5-1〉 미국 수산물·수산물식품 수입 관련 현행 주요 비관세장벽

구분	현행 조치	시행 예정 조치	
	수산물 HACCP 관련 수입경보	해양포유류보호법상 수산물 수입 조건	수산물 수입 감시제도
시행일	현재 시행 중	2022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규정 내용	수산물 HACCP 관련 규정 미준수 수산물에 대해 물리적 검사 없는 역류 조치	對미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해외어업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국 어업을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으로 분류해 동등성 평가를 실시	IUU 어업 및 원산지세탁에 취약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강화된 기록물 관리·보관 의무 부과
영향	수입경보가 발동되면 적용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물리적 검사 없는 역류조치 적용	동등성이 부인되는 경우 수입 금지	수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거부
대응 방안	미국 수산물 HACCP 규정 준수 방안 마련	해양포유류 개체 수, 부수어획량 제한, 국내 어업별 포유류 혼획량 등에 대한 기초연구 및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입법	현재 국내 조업감시시스템에서 취합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주: 저자 작성

중국의 수산물 교역액은 296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연평균 5.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입이 전체 교역액의 31%(2016년 기준) 가량이나,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소비재 수산물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국 내 수산물·수산물식품의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중국 수산물 수입 관련 주요 제도를 보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관할하는 식품안전법을 상위법으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관할의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험법, 국경위생검역법 등으로 구성된다.

〈표 5-2〉 중국 수산물·수산식품 수입 관련 현행 주요 비관세장벽

구분	현행 조치	
	국가표준제도 기준 적용	사전검사검역허가제
규정내용	조미김, 한국전통식품에 유사 식품의 국가표준 기준 적용	신규 수출품목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 위험 분석(5단계)을 통한 수출 유무 결정
영향	기준 미 충족 시 통관 거부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의 기간 소요 과도한 행정 절차, 방대한 서류 요구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협상 원활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 - 대표 수출 품목에 대한 글로벌 제조·위생 규범 선도 - 전통수산식품의 제조 특성에 대한 상대국 이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간 통관·검역 기준 절차의 표준화·간소화 -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주 : 저자 작성

중국의 국가표준제도는 조미김, 한국전통식품인 젓갈 등이 중국 고유의 식품 표준 내 위생기준과의 불일치성으로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평가된다. 사전검사 검역허가제는 중국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 수출 농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시간 소요 과다, 방대한 정보 요구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제도 운용의 폐쇄성·불통일성으로 실질적 비관세장벽이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15년 10월 식품안전법을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개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생산·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 상위기관 중심의 제도 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거의 통관·검역 관행이 유지되는 실정으로, 통관 지역·담당자 성향에 따른 상이한 규정 적용으로 수출업체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수출 협상 원활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 대표 수출 품목에 대한 글로벌 제조·위생 규범 선도, 전통수산식품의 제조 특성에 대한 상대국 이해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중 간 통관·검역 기준 절차의 표준화·간소화,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도 추진할 시점이다.

제2절 정책 제언

1. 수산물 비관세장벽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수산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미국, 중국은 자국 국민,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산물에 관련된 TBT, SPS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각국의 내부적인 법률·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업계의 역량만으로는 정보 수집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비관세조치 중 정해진 몇 개 분야는 WTO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으나, 각국의 판단에 따라 WTO 보고 건수, 제도 실행, 업계의 체감 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요 수출국의 경우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정부기관, 민간기관, 언론 등의 종합 모니터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과 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 확산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한다.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산·학·관·연이 참여한 국내 대응 실태를 분석,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수출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의 적극적 홍보, 확산 추진이 요구된다.

2. 합리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R&D 및 이력 정보 관리 체계화

수산물 수출 원활화를 위한 기초 연구 개발 추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미국의 포유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수출업종으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요구 항목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 R&D 추진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수출 협상 원활화,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도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이 조미김, 젓갈 등에 적용하는 수산가공품의 위생 기준 현실화를 위해서는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 혹은 품목의 규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 중국은 조미김에 대한 균락총수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미김 수출업체는 균락총수 기준치 충족 요건 때문에 對 중국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 실적을 보더라도 김의 경우 통관 거부 사유의 높은 비중을 해당 사유가 차지한다.

국제협상에서의 규제 기준 완화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선제적 혹은 사후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법률적·과학적 근거 축적 등을 위한 국내 인프라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글로벌 규범의 선도도 추진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은 안전성 또는 친환경성 등의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자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세부 정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기 시작한 만큼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생산부터 수출까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수집과 정보 관리 체계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3. 국제 협상을 통한 검역 기준 현실화, 절차 표준화

한국 고유 수출품의 제조·가공 특성에 대한 수출 대상국 검역 당국의 이해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 혹은 품목의 규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상대국 제품 특성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는 제반 활동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통수산식품의 수출은 검역·통관 시 적용되는 기준이 수출대상국의 유사 식품으로 분류하여 관련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전통수산식품의 제조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나 또는 예외 적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한-중 간 통관·검역 기준·절차 표준화·간소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사회·정치적 상황 변화 시 여러 가지 우회적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 통관·검역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절차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동일 제품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통관·검역 환경에 직면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수입에 앞서 위험 분석을 사전 실시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경우 제도의 복잡성, 장기간의 소요 기간으로 신규 품목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시의 적용 기준, 절차 등을 표준화하거나 간소화해 공동 적용함으로써 중국 수출 통관·검역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4. 국내 관련 제도 정비와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

국내 제도의 정비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이중 부담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수출 대상국에 대해 자국의 HACCP에 해당하는 생산·제조 프로그램의 도입과 이행을 요구한다.

이 때 미국의 HACCP은 국내 제도와는 상이한 제도로, 수출업체는 이중적 제도 운영으로 과도한 절차의 준수와 비용 소요를 문제로 지적한다. 수출국 제도와 국내 제도 간 정합성 추구 또는 수출용 HACCP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중적 제도 도입을 통한 비효율성의 제거를 추진해 볼 수 있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사전에 규제준수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실제 주요국의 통관 거부 실적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장벽보다는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산물을 수출하기 이전에 해당국으로의 수출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서 규제준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우 중소·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전문인력 부재로 신규 시장 및 수입국 규제준수 요건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업체의 규제준수는 수산물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마련 및 컨설팅 수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5.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비관세장벽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대국과의 네트워킹, 파트너십 구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부 협상을 통한 비관세장벽 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상당수의 기술적 조치는 단기간에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에 세계 주요국별로 수출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로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다.

즉, 세계 주요국 수출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컨택 포인트를 발굴하여,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당국 유관기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정치 및 사회문화적 이슈를 넘어 비관세장벽에 대해 원만하면서도 냉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양국 간 기술 규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좋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수출 상대국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킹, 파트너십 구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도 가능한 것이다. 일례로 미국 내에서도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제도를 둘러싸고 업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입업체, 원료 수요처인 가공업체·유통업체 등과의 공조로 수출국의 현상을 일정 부문 제도 내에 반영하는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상인·이수광·김용중·김민주·박선영·허민수·김진수, 「시판 마른청어(*Clupea pallasii*) 및 마른멸치(*Engraulis japonicus*)의 위생 특성 비교 및 품질기준 제시」, 『한국수산물과학학회지』, 48(5), 2015.
- 김연수, 「미국 FDA의 수입 경보에 대응해야」,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vol.4.』, 2017.4.
-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중국 식품안전법령집』, 2016.
- 류창수,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 『통상법률』, 93, 2010.
- 선아름·나희량,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19(1), 201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6.4.
- 손호선·목정임·최영민·박겸준,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31(2),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 「19. 수산가공식품류 ‘19-2 젓갈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2017.5.25.(검색일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19. 수산가공식품류 ‘19-4 조미감」,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2017.5.25.(검색일 기준)
-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47, 2014.
- 이재영, 「WTO 기술무역협정과 위행 및 식물검역협정과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4), 2007.
- 이탁·윤기관, 「비관세장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 동북아경제연구』, 26(1), 2014.
- 정환우,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시사점」, 『한중사회과학학회』, 11(3), 2013.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관리방법(총국령 제31호).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총국령 제 135호).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관리방법, 2003.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 수생동물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 2016.
-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GB 19643-2016 ‘식품안전 국가표준 조류 및 그 제품」, 2017.4.23.(검색일 기준)
-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GB 10133-2014 ‘식품안전 국가표준 수산 조미품」, 2017.4.23..(검색일 기준)
- 중국 위생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GB 19643-2005 ‘조류제품 위생표준」, 2017.4.23.(검색일 기준)
- 하태정·송종국·정다울·전주용·장용준·문선웅,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정책연구』, 2010.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 보고』, 2015.
- 해양수산부, 『對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2016.8.

〈국외 문헌〉

-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2017. 01.
- FDA, *FDA's Draft Approach for Designating High-Risk Foods as Required by Section 204 of FSMA*, 2014. 02.
- Federal Register, *Section 172.340(a)(1) Fish protein isolate,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 Mammal Protection Act*, 81 Fed. Reg. 54390, 2016. 08. 15.
-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 12. 09.
- Federal Register, *Procedures for the Safe and Sanitary Processing and Import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60 Fed. Reg. 68096, 1996. 02. 16.
- Jacqueline Kohak, *FSMA Era Opens with Uncertainties for Seafood*. Food Safety Magazine, 2012.12/2013.01
- NOAA, *Compliance Guide-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mport Provisions to Reduce Marine Mammal Bycatch*, 2016.
- NOAA Fisheries, *U.S.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Fact Sheet*, 2016. 12. 08.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FDA Refusals of Imported Food Products by Country and Category, 2005~2013*, 2016.
- 중국 식품표준 및 감측 평가사, 「식품안전표준 및 감측 평가 “13.5 계획”」, 2016.11.

〈법률〉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50, Part 229, Authorization for Commercial Fisheries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123, Fish and Fisheries Products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A)
-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MSA)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MMP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 2009.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식품안전법, 2015.

〈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7.5.3.)

미국 식품의약국, Fish and Fishery Product Imports: Affirmative Steps(<http://www.inspection.gc.ca/food/fish-and-seafood/exports/by-jurisdiction/usa/establishments-approved-for-export/eng/1304428645296/1304428789402>)(2017.4.17.)

미국 식품의약국, Import Alerts(<https://www.fda.gov/ForIndustry/ImportProgram/ActionsEnforcement/ImportAlerts/default.htm>,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default.html)(2017.4.6.)

미국 식품의약국, Import Alerts by Number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alist.html)(2017.4.10.)

미국 식품의약국, Import Refusals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importrefusals>)(2017.4.7.)

미국 식품의약국, OASIS Import Refusal Report,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mportrefusals/>)(2017.4.11.)

미국 식품의약국, (<https://www.fda.gov/ForIndustry/ImportProgram/ucm2005484.htm>)(2017.4.5.)

미국 해양대기국, NOAA Legacy
(<http://www.history.noaa.gov/noaa.html>)(2017.6.7.)

미국 해양어업청, (<http://www.nmfs.noaa.gov/pr/interactions/>)(2017.6.9.)

미국 해양어업청, Magnuson-Stevens Act Fisheries Conservation & Management Act(<http://www.westcoast.fisheries.noaa.gov/>

- whatwedo/msa/magnuson_stevens_act.html)(2017.6.7.)
- 미국 해양어업청, Marine Mammals
(<http://www.nmfs.noaa.gov/pr/species/mammals/>)(2017.4.30.)
- 미국 해양어업청,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List of Fisheries
(<http://www.nmfs.noaa.gov/pr/interactions/fisheries/lof.html>)
(2017.4.17.)
- 미국 해양어업청, Our Mission
(<https://www.fisheries.noaa.gov/about-us>)(2017.6.7.)
- 미국 해양어업청, Regulations to Implement Import Restrictions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2016. 09
(http://www.pcouncil.org/wp-content/uploads/2017/02/J1a_NMF_S_Rpt2_Regs_MMPA_ElectricOnly_Mar2017BB.pdf)(2017.3.17.)
- 워싱턴 주 농무부,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https://agr.wa.gov/foodsecurity/thebioterrorismact.aspx>)(2017.6.9.)
-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http://www.aqsiq.gov.cn>,
http://www.aqsiq.gov.cn/xxgk_13386/zxxxgk/201512/t20151222_457052,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701/t20170120_481377.htm,
(http://www.aqsiq.gov.cn/xxgk_13386/ywxx/dzwjy/201406/t20140626_416136.htm)(2017.4.20.)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032004/201210/t20121015_235190.htm)(2017.4.23.)
- 중국 품질검험협회
(<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2017.3.25.)
-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플랫폼(<http://bz.cfsa.net.cn/db>)(2017.4.23.)
-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www.trass.or.kr>)(2017.4.30.)
- Global Trade Atlas
(<http://www.gtis.com/gta>)(2017.4.30.)(2017.4.20.)(2017.2.15.)
- Marine Mammal.(n.d.). In Wikipedia. Retrieved April 30, 2017

- (https://en.wikipedia.org/wiki/Marine_Mammal_Protection_Act)
(2017.4.30.)
- NOAA. (n.d.). In Wikipedia. Retrieved March 27, 2017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Oceanic_and_Atmospheric_Administration)(2017.6.7.)
- <https://www.newfoodmagazine.com/news/41625/fighting-food-fraud-testing-without-wait/> (2016.5.17.)

마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 인 쇄	2017년 5월 29일 인쇄
• 발 행	2017년 5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양 창 호
•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조판·인쇄	(주)갭스앤디컴퍼니 Tel : 051-911-9890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6,000원